

목 차

	2024년 대전-세종-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 개요 1
기조발제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 (권소일 한남대학교 교수) 5
주제발표 1	자활기업 창업이전 단계에서의 정책 제안 (이현수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장) 37
주제발표 2	자활기업 창업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방안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45
좌 장	김승용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1	김기흥 한국자활기업협회 정책위원장 51
토론 2	황정구 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59
토론 3	신동호 대전대덕지역자활센터장 63
토론 4	서광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67

2024년 찾아가는 대전-세종-충청지역 자활정책포럼(안)

(사무국-김재철 사무국장)

□ (추진배경)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021년부터 실효성 있는 자활정책 개발을 위해 권역별 자활 정책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음
- 대전-세종-충청권역은 2023년부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자활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포럼을 추진함
 - 2023년 충청권 자활정책포럼(자활기금 운영 및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 충청권 자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책포럼 활용 필요

□ (추진 목적)

- 충청권 자활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전문가 등 인프라 확대 구축
- 지역현장과 자활 전문가와 연계하여 충청권 공동의 자활 정책이슈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자활정책 개발을 통해 충청권 자활사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
-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 포럼개요

- (주 제) 지속가능한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 (일 시) 2024년 5월 23일(목) / 14:00 ~ 16:30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인정)
- (장 소)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참석자) 총 150명(자활관련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 (주 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공동주관) 충남광역자활센터, 대전광역자활센터, 충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 대전지부, 충북지부
한국자활기업협회 충남지부, 대전지부, 충북지부, 세종지부

□ 기초발제자 및 토론자

- 기초 발제자 및 기관별 발제자
 - 기초 발제자(권소일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발표자(이현수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장)
 - 주제 발표자(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 좌장 및 토론자
 - 좌 장: 김승용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장
 - 토론 1: 황정구 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 토론 2: 김기흥 한국자활기업협회 정책위원장
 - 토론 3: 신동호 대전대덕지역자활센터장
 - 토론 4: 서광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 사회자: 김재철 충남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 세부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사회: 김재철(충남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인사말	‘15 · 개회사(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 축 사(서용식, 한국자활기업협회장) · 축 사(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기초발제 1	‘30 · 발제: 지속가능한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권소일, 한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표 2	‘15 · 발표: 자활기업 창업이전 단계에서의 지원체계 (이현수, 아산지역자활센터장)
14:00~ 16:30 (150분)	발표 3	‘15 · 발표: 자활기업 창업 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방안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휴 식	‘15
	토론 및 질의	· 좌장: 김승용(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1 김기흥(한국자활기업협회 정책위원장) 토론2 황정구(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토론3 신동호(대전대덕지역자활센터장) 토론4 서광국(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10 · 현장 질의응답
	마무리	‘5 마무리
17:00~	만찬	· 인근 식당

- 기초발제 -

(권소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

: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¹⁾를 기반으로

발표자: 권소일(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근거와 역할을 마련한 이후 자활기업은 지난 20년 간 수급자, 차상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하는 공동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김정원, 2018; 김재호, 2020; 조준용 외, 2022).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기업으로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15,000여명의 수급자, 차상위자, 취약계층이 자활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1년 대비 24.5% 감소한 수치이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수 역시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21년 기준 창업수 76개로 최저치 기록).

이처럼 자활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계기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 영역안에 포함시키며 위협은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활기업의 영세한 조직규모와 인적자본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으며, 자활기업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 확보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서의 정체성 모호성 등은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다양한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활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통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자활기업 관련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전략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활기업 대한 심층적이고, 전국 단위에서의 자활기업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부족했다. 자활기업 현재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 지형을 이해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향후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본 발표문은 2023년 실시한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기업 운영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1)일하는 사람 2) 판로 및 홍보방안 3)운영자금 4) 자원연계 5) 공간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파악하고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실제 창업이전단계에서의 어려움과 창업이후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의 풍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

Ⅲ. 연구방법

1. 조사 문항 및 응답현황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총 6가지 영역의 4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6개 영역은 자활기업 기본 정보, 운영현황, 자활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 조직성과, 정책방향, 법인전환이슈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조사대상은 2023년 4월 기준 자활기업 사업보고를 마친 자활기업 938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자활기업 대표자 혹은 자활기업을 잘 아는 임원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한 기업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달간 진행되었으며, 624개소가 응답하여 회수율 66.5%를 보였다. 또한 종사자의 응답은 1,330명으로 할당된 표본 중 41.1%가 응답하였다.

<표 5> 조사문항

조사영역		조사내용
자활기업 조사	기본정보(11문항)	소개지*, 구성원(대표, 임원, 직원), 월급을 받는 구성원, 그 중 취약계층, 자활기업 설립일*, 사업장 점유형태*, 임차형태*, 자금조달 방법*, 자금 주요용도, 자금 액수 자금조달시 어려운점
	운영현황(6문항)	기업 생애주기*, 운영과정에서 힘든점, 판로 종류*, 판매비율*, 홍보 방법*, 홍보 미실시 이유
	네트워크 및 협력(5문항)	타조직과 협력사업 수행경험*, 연계정도*, 협력하지 않은 이유, 협의체 가입여부, 가입협의체 이름, 네트워크 활동이유
	조직성과(4문항)	사회적가치 실천정도, 중요 사회적가치, 경제적성과 변화, 사회적성과 변화
	정책방향(9문항)	최근 지원받은 제도*, 도움정도*, 필요한 지원정책, 지역자활센터 지원여부, 광역자활센터 지원여부, 개발원 지원여부, 만족도, 미지원 이유, 불만족 이유
	법인전환(7문항)	향후 1년뒤 계획, 개인사업자 여부, 전환고려 여부, 법인 미고려 이유, 법인 전환시 필요정책, 법인 설립이유, 법인운영 고충
조사영역		조사내용
대표 및 종사자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구 구성, 주요 경력분야 및 기간, 수급 경험, 연간 수급개월수 및 급여액, 탈수급 이후 필요한 급여종류, 과거 직업 경험(기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업종, 직종, 월평균소득, 실직사유), 가구 소비/저축 및 자산/부채, 주거환경, 건강 및 가족 관계, 자립의지, 자활기업 인지 경로, 취·창업 시기, 취·창업 이유 근무형태
	근무처우 및 만족도	근무시간, 자활기업 고용/근로 환경 기대 수준 및 만족도, 월평균 임금액*, 자활기업 직장만족도
	조직문화	조직문화 만족도
	기업가정신	기업자 정신에 대한 평가, 일하면서 느낀 변화*
	교육 및 복리후생	자활기업 근로를 위한 교육 필요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리후생제도*
	이직의향	이직(폐업) 의향 / 이유, 현재 자활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이유, 이직(폐업) 시 취업 희망 기관

주: 본 발표문에는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해당 문항에 *표시 함.

<표 6>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자활기업 대표자(대표자 및 임원)
표본 수	자활기업 938개소
표본 설계	전수조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
조사기간	2023년 9월 ~ 2023년 11월
회수율	624개소(66.5%)

II. 주요결과

1. 자활기업 기본 현황

자활기업의 기본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구성원 현황, 인건비를 받는 구성원 현황, 사업장 점유형태 등을 알아보았다.

1) 자활기업의 일반적 특성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624개 자활기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기업의 규모는 3-5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2020년 사이에 29.5%가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가 56.7%로 개인사업자(43.3%)보다 많으며, 업종은 집수리(21.6%), 세탁·청소(19.4%), 생산·가공(17.5%), 배송·운전(15.4%)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소재지는 경기지역(14.6%)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13.9%)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8.8%)과 경남(8.8%)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활기업 일반적 특성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24	100.0	전체	624	100.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6.3	업종	생산·가공	109	17.5
	3인-5인 미만	256	41.0		집수리	135	21.6
	5인-10인 미만	163	26.1		세탁·청소	121	19.4
	10인-15인 미만	18	2.9		배송·운전	96	15.4
	15인-30인 미만	13	2.1		음식점	68	10.9
	30인 이상	10	1.6		유통·판매	48	7.7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0.8		사회서비스	32	5.1
	2010년-2015년	175	28.0		재활용·환경	8	1.3
	2016년-2020년	184	29.5		기타	7	1.1
	2020년 후	135	21.6		사업자	개인	270
소재지	서울	87	13.9		법인	354	56.7
	부산	46	7.4		강원	31	5.0
	대구	24	3.8		충북	20	3.2
	인천	35	5.6	충남(세종)	39	6.3	
	광주	18	2.9	전북	55	8.8	
	대전	15	2.4	전남	45	7.2	
	울산	14	2.2	경북	31	5.0	
	경기	91	14.6	경남	55	8.8	
				제주	18	2.9	

(1) 총인원

자활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은 평균 11.5명으로 대표, 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수급자 구성원은 3.7명, 비수급자 구성원은 7.8명이다. 대표(최고관리자)를 맡고 있는 수급자는 평균 1.0명, 이사는 0.7명이며, 직원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자 중에서는 대표 0.7명, 이사 0.8명, 직원 6.3명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환경 업종에서 수급자 임원(대표,이사)이 평균 2.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비수급자 임원(대표, 이사)이 4.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평균 78.1명으로 타 업종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자활기업 구성원(평균)

(단위 : 개, 명)

구분	사례 수	총인원	수급자·차상위			비수급자			
			대표	이사	직원	대표	이사	직원	
전체	624	11.5	1.0	0.7	2.0	0.7	0.8	6.3	
인 증 시 기	2010년 전	130	22.0	0.7	0.9	2.0	1.1	1.4	16.1
	2010년-2015년	175	13.5	0.8	0.6	2.5	0.8	1.1	7.7
	2016년-2020년	184	7.3	1.1	0.6	2.1	0.6	0.6	2.4
	2020년 후	135	4.4	1.3	0.9	1.3	0.2	0.3	0.4
사 업 자	개인	270	3.6	1.2	0.2	0.9	0.6	0.1	0.6
	법인	354	17.5	0.8	1.1	2.9	0.7	1.4	10.7
업 종	생산·가공	109	10.4	1.1	0.6	2.8	0.7	0.7	4.5
	집수리	135	5.9	0.6	0.7	1.1	0.8	0.9	1.6
	세탁·청소	121	9.0	1.0	0.6	1.7	0.6	0.8	4.4
	배송·운전	96	5.4	0.9	0.8	1.0	0.5	0.7	1.5
	음식점	68	3.7	1.3	0.5	0.7	0.4	0.3	0.4
	유통·판매	48	5.3	1.3	0.8	1.8	0.4	0.5	0.6
	사회서비스	32	96.4	0.8	1.4	11.6	1.4	3.0	78.1
	재활용·환경	8	2.9	1.1	1.3	0.4	0.1	0.0	0.0
	기타	7	3.4	0.7	0.1	1.3	0.4	0.7	0.1
소 재 지	서울	87	12.6	1.2	0.9	1.1	0.5	0.9	8.1
	부산	46	12.2	1.1	0.4	1.6	0.5	0.4	8.2
	대구	24	8.8	1.4	0.6	1.1	0.5	0.8	4.3
	인천	35	20.0	0.5	0.7	2.5	0.9	1.2	14.2
	광주	18	5.3	1.1	0.8	0.9	0.7	0.8	1.0
	대전	15	6.1	0.9	0.7	1.7	0.5	0.3	2.0
	울산	14	6.3	1.1	0.5	1.2	0.6	0.6	2.3
	경기	91	16.6	0.9	0.9	4.2	0.6	0.9	9.0
	강원	31	14.7	0.7	0.5	0.9	0.7	1.2	10.7
	충북	20	24.6	1.4	0.9	2.1	1.3	1.3	17.7
	충남(세종)	39	15.9	0.9	0.8	5.9	0.7	1.0	6.6
	전북	55	6.6	1.1	0.5	1.3	0.7	0.6	2.6
	전남	45	5.7	0.6	0.5	1.1	0.9	0.7	2.0
	경북	31	4.3	1.0	0.6	0.7	0.6	0.5	1.0

구분	사례 수	총인원	수급자·차상위			비수급자		
			대표	이사	직원	대표	이사	직원
경남	55	6.0	0.8	0.9	0.8	0.7	1.0	1.8
제주	18	9.7	1.1	0.9	3.0	0.6	1.4	2.7

2. 일하는 사람

1) 월평균 임금

자활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세후 기준 평균 206.84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평균 222.51만 원이며,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35.5%)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41.6%)로 나타났으나, 200만 원 이하 임금의 비율(여성, 44.3%)이 남성(34.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평균 임금은 196.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월평균 임금은 196.03만 원이며,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이 44.1%로 가장 높고, 30대는 평균 214.17만 원으로,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36.8%)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평균 220.97만 원, 50대는 평균 220.97만 원, 60~64세는 196.33만 원, 65세 이상은 171.28만 원으로 확인되어 40대를 정점으로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다.

기업 규모로 살펴보면 3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227.2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이 219.54만 원, 1인 이상-3인 미만 기업이 212.69만 원, 5인 이상-10인 미만 기업은 206.27만 원, 마지막으로 3인 이상-5인 미만 기업이 가장 낮은 평균 임금(199.75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9> 월 평균 임금(세후 기준)

(단위 : %, 만원)

특성		사례수 (명)	150만 원 미만	150~ 200만 원	200 ~ 250만 원	250~ 300만 원	300 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만원)
전체		1,330	12.5	28.0	39.2	12.3	7.7	0.3	206.84
성별	남성	530	9.6	25.3	35.5	16.4	13.2	0.0	222.51
	여성	800	14.4	29.9	41.6	9.6	4.0	0.5	196.41
연령	20대	102	11.8	44.1	30.4	7.8	5.9	0.0	196.03
	30대	174	7.5	29.3	36.8	19.0	7.5	0.0	214.17
	40대	310	8.7	28.7	36.8	13.9	11.6	0.3	220.97
	50대	449	10.7	24.5	43.9	12.9	7.3	0.7	209.64
	60~64세	188	19.1	24.5	41.0	9.0	6.4	0.0	196.33
	65세 이상	107	28.0	29.9	35.5	4.7	1.9	0.0	171.28
학력	초졸 이하	77	22.1	33.8	41.6	2.6	0.0	0.0	175.73
	중졸	124	22.6	29.0	41.9	4.0	2.4	0.0	184.04
	고졸	617	13.6	34.2	36.1	9.9	5.8	0.3	198.19
	대졸 이상	512	7.2	19.5	41.8	18.8	12.3	0.4	227.52
수급 유형	수급자	459	18.3	42.3	34.2	3.9	1.1	0.2	179.32
	차상위	96	14.6	33.3	44.8	3.1	4.2	0.0	193.26
	해당 없음	775	8.8	19.0	41.4	18.5	12.0	0.4	224.86
직급	직원(부장 이상)	1098	13.2	29.5	39.4	11.7	5.8	0.3	202.82
	임원	227	8.8	21.1	37.4	15.4	16.7	0.4	227.10
	기타	5	20.0	20.0	60.0	0.0	0.0	0.0	171.6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221	9.0	27.6	41.2	13.6	8.1	0.5	212.69

특성		사례수 (명)	150만 원 미만	150~ 200만 원	200 ~ 250만 원	250~ 300만 원	300 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만원)
	3인-5인 미만	461	13.7	31.0	40.1	9.1	5.4	0.7	199.75
	5인-10인 미만	394	11.2	30.2	39.1	11.9	7.6	0.0	206.27
	10인-15인 미만	87	18.4	21.8	32.2	21.8	5.7	0.0	200.00
	15인-30인 미만	81	27.2	25.9	19.8	4.9	22.2	0.0	219.54
	30인 이상	86	1.2	11.6	54.7	25.6	7.0	0.0	227.23

2) 자활기업에서 일하며 느낀 변화

자활기업 종사자가 자활기업에서 일하며 느낀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나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나의 역할과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가 7.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활기업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구성원으로 일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와 '자활기업에서 일하면서 나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다'가 7.4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식, 기술, 자격 습득으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7.40점), '자활기업에서 일하면서 삶의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변화 동의 정도가 7.38점 이상으로 대체로 자활기업에서 일하며 긍정적 변화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활기업에서 일하며 느낀 변화 (10점)

(단위 : 점)

특성		사례수 (명)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자긍심	삶의 목표가 생겼고 이루기 위해 노력	자격습득으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	내가 가치 있고, 역할과 역량이 성장함	나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정됨
전체		1,330	7.48	7.38	7.40	7.55	7.48
성별	남성	530	7.53	7.41	7.33	7.49	7.49
	여성	800	7.44	7.36	7.45	7.59	7.48
연령	20대	102	7.13	7.33	7.38	7.45	7.65
	30대	174	7.41	7.16	7.20	7.44	7.28
	40대	310	7.39	7.21	7.48	7.55	7.39
	50대	449	7.45	7.47	7.43	7.61	7.47
	60~64세	188	7.75	7.57	7.38	7.59	7.64
	65세 이상	107	7.78	7.58	7.43	7.52	7.68
학력	초졸 이하	77	7.17	7.01	6.84	7.09	7.05
	중졸	124	7.35	7.67	7.48	7.51	7.85
	고졸	617	7.49	7.49	7.46	7.61	7.70
	대졸 이상	512	7.53	7.24	7.40	7.56	7.19
수급 유형	수급자	459	7.39	7.54	7.33	7.51	7.58
	차상위	96	6.98	7.05	7.18	7.08	7.42
	해당 없음	775	7.59	7.33	7.47	7.63	7.43

특성		사례수 (명)	자활기업에 서 일하는 자긍심	삶의 목표가 생겼고 이루기 위해 노력	자격습득으 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	내가 가치 있고, 역할과 역량이 성장함	나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정됨
직급	직원(부장 이상)	1098	7.40	7.31	7.33	7.47	7.45
	임원	227	7.89	7.77	7.81	7.97	7.64
	기타	5	5.80	6.20	5.80	6.40	6.6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221	7.40	7.33	7.32	7.56	7.47
	3인-5인 미만	461	7.52	7.43	7.40	7.49	7.35
	5인-10인 미만	394	7.21	7.15	7.22	7.42	7.35
	10인-15인 미만	87	7.91	7.95	8.21	8.03	8.36
	15인-30인 미만	81	7.77	7.70	7.01	7.49	8.01
	30인 이상	86	7.95	7.45	8.01	8.01	7.44

3) 복리후생제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복리후생제도 1순위는 ‘종합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지포인트 지원이 30.5%를 나타냈다. 이밖에 직원포상제도(29.5%), 안식 휴가제(장기근속휴가제)(19.1%), 근로자 대출/이자 지원(17.9%), 교육훈련비(보수교육비)(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문화·체육·오락비용 지원(10.8%), 직원 휴게시설(9.8%), 유급병가제(8.8%), 근로자 학자금 지원(8.0%), 해외연수 지원(6.6%), 휴양시설 지원(5.1%) 등이 있다. 1+2순위 종합은 ‘종합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3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복지포인트 지원’(30.5%), ‘직원포상제도’(29.5%), ‘안식 휴가제(장기근속 휴가제)’(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리후생제도로 ‘종합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복지포인트 지원’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1>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1, 2순위 종합)

(단위 : 명, %)

특성	사례수	복지포인트	종합검진	안식휴가제	해외연수	근로자대출	직원포상	학자금지원	휴게시설	유급병가제	교육훈련비	문화비	휴양시설	기타	없음	
전체	1,330	30.5	37.4	19.1	6.6	17.9	29.5	8.0	9.8	8.8	15.3	10.8	5.1	0.6	0.4	
성별	남성	530	28.1	34.2	16.8	7.0	22.1	34.3	8.7	7.0	8.1	14.9	11.7	6.0	0.6	0.2
	여성	800	32.0	39.6	20.6	6.4	15.1	26.4	7.5	11.6	9.3	15.5	10.3	4.5	0.6	0.5
연령	20대	102	26.5	26.5	20.6	8.8	18.6	47.1	2.9	8.8	7.8	12.7	13.7	2.0	2.9	0.0
	30대	174	29.9	31.6	19.5	6.9	19.0	31.0	10.9	6.9	6.3	23.6	10.3	1.7	0.6	1.1
	40대	310	32.9	33.9	19.7	7.7	17.7	29.4	12.3	9.4	8.1	14.5	7.7	5.5	0.6	0.6
	50대	449	28.7	39.2	16.9	5.8	20.0	27.8	8.2	10.5	9.8	16.9	11.1	4.2	0.4	0.2
	60~64세	188	35.1	41.5	22.3	6.9	15.4	24.5	4.3	10.6	9.6	8.0	13.3	8.5	0.0	0.0
	65세 이상	107	27.1	53.3	18.7	3.7	11.2	27.1	0.9	12.1	10.3	12.1	12.1	10.3	0.0	0.0
학력	초졸 이하	77	28.6	41.6	16.9	3.9	20.8	26.0	9.1	15.6	13.0	9.1	11.7	3.9	0.0	0.0
	중졸	124	33.1	52.4	13.7	4.0	17.7	27.4	7.3	9.7	6.5	12.1	10.5	5.6	0.0	0.0
	고졸	617	26.4	40.0	18.8	5.2	18.5	30.5	10.0	9.2	8.6	14.6	11.8	5.3	0.3	0.3
	대졸 이상	512	35.0	30.1	21.1	9.4	16.8	29.5	5.5	9.6	9.0	17.8	9.6	4.9	1.2	0.6

특성		사례 수	복지포인트	종합검진	안식휴가제	해외연수	근로자대출	직원포상	학자금지원	휴게시설	유급병가제	교육훈련비	문화비	휴양시설	기타	없음
수급유형	수급자	459	29.2	36.2	17.9	4.8	21.6	28.3	12.4	8.3	8.5	13.9	13.3	4.8	0.4	0.2
	차상위	96	31.3	44.8	16.7	5.2	19.8	33.3	7.3	8.3	10.4	12.5	7.3	3.1	0.0	0.0
	해당 없음	775	31.1	37.3	20.1	7.9	15.5	29.8	5.4	10.8	8.8	16.4	9.8	5.5	0.8	0.5
직급	직원(부장)	1098	31.8	37.4	19.7	6.5	16.0	29.2	7.6	10.5	9.4	15.0	10.7	4.9	0.6	0.5
	임원	227	24.2	37.0	16.3	7.0	26.9	31.3	9.7	6.2	6.2	16.7	11.5	6.2	0.4	0.0
	기타	5	20.0	6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221	29.9	37.1	17.2	5.9	19.9	27.6	7.7	9.5	9.0	17.6	11.3	5.4	1.8	0.0
	3인-5인 미만	461	24.7	33.8	18.4	7.2	20.2	32.8	7.6	12.1	8.2	16.7	11.7	5.2	0.2	0.9
	5인-10인 미만	394	34.8	38.8	18.3	7.1	15.5	28.9	9.6	7.9	7.1	17.0	8.6	5.3	0.3	0.3
	10인-15인 미만	87	40.2	48.3	17.2	4.6	16.1	29.9	3.4	5.7	13.8	5.7	9.2	5.7	0.0	0.0
	15인-30인 미만	81	19.8	42.0	21.0	4.9	17.3	39.5	11.1	11.1	9.9	6.2	16.0	1.2	0.0	0.0
	30인 이상	86	43.0	36.0	31.4	7.0	14.0	10.5	4.7	9.3	12.8	11.6	11.6	5.8	2.3	0.0

3. 판로 및 홍보

1)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종류 및 비율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지 질문하였다. 자활기업의 44.9%가 정부와 계약을 맺는 B2G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43.9%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B2C), 10.5%가 기업과 계약(B2B)하는 방식이었다.

B2C방식에서는 자체매장에서 판매하는 비율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판매(79.2%), 음식점(64.3%) 등의 업종에서 자체매장 판매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회서비스(27.1%), 세탁·청소(19.0%)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기 인증기업(57.9%)의 경우 B2G방식의 계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계약 경로를 선점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기단계의 기업들은 41.6%가 자체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이들의 판로를 확보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 종류 및 비율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B2C(소비자)					비대면 창구	B2B 기업 계약	B2G 정부 계약	기타
		자체매장	대형 온라인	직영 온라인	지역장터	지역장터				
전체	624	28.0	3.8	1.1	2.8	8.2	10.5	44.9	0.7	
생애 시작단계	55	28.9	4.4	1.0	4.3	7.5	12.9	39.2	1.8	

	구분	사례수	B2C(소비자)					B2B 기업 계약	B2G 정부 계약	기타
			자체 매장	대형 온라인	직영 온라인	지역장 터	비대 면 창구			
주기	생존단계	161	27.0	4.0	1.5	4.1	6.9	10.8	45.7	0.0
	성장단계	219	26.1	3.6	1.2	2.3	7.8	11.3	46.2	1.5
	성숙단계	101	21.6	4.9	0.4	1.6	9.8	10.5	51.1	0.1
	위기단계	88	41.6	2.4	0.9	2.0	10.2	6.4	36.5	0.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6.8	4.8	0.9	3.1	9.5	9.4	45.0	0.6
	3인-5인 미만	256	32.1	4.4	1.3	3.5	7.0	8.8	42.4	0.6
	5인-10인 미만	163	23.9	2.1	1.2	1.9	7.4	13.8	48.5	1.2
	10인-15인 미만	18	13.6	1.7	0.3	0.0	13.4	10.9	60.1	0.0
	15인-30인 미만	13	28.8	7.8	0.0	0.0	5.8	18.5	39.2	0.0
	30인 이상	10	35.5	0.5	0.0	2.0	24.0	9.0	29.0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15.9	2.9	0.2	1.1	9.8	12.3	57.9	0.1
	2010년-2015년	175	19.4	3.2	1.3	1.8	8.0	9.7	56.0	0.6
	2016년-2020년	184	33.6	4.2	1.4	2.9	8.4	9.8	38.0	1.7
	2020년 후	135	43.4	5.0	1.3	5.5	6.7	10.8	27.3	0.2
사업 자	개인	270	37.6	4.6	1.4	3.9	8.4	8.8	34.6	0.8
	법인	354	20.8	3.3	0.9	1.9	8.0	11.8	52.8	0.7
업종	생산·가공	109	32.8	8.0	1.6	6.2	9.8	15.0	24.6	2.0
	집수리	135	5.3	0.4	0.2	0.3	1.4	10.2	81.5	0.8
	세탁·청소	121	19.0	2.7	1.5	1.7	12.9	19.0	43.2	0.0
	배송·운전	96	11.4	0.9	0.9	1.1	5.3	6.3	73.8	0.2
	음식점	68	64.3	7.2	1.3	4.8	9.6	2.9	9.8	0.0
	유통·판매	48	79.2	2.5	2.3	4.1	3.7	1.6	6.5	0.0
	사회서비스	32	26.6	10.9	0.2	3.1	27.1	5.6	23.4	3.1
	재활용·환경	8	65.6	6.3	1.3	4.4	4.4	5.6	12.5	0.0
기타	7	38.4	4.6	0.6	4.3	5.9	19.1	27.1	0.0	
소재 지	서울	87	36.4	4.5	1.8	3.0	10.5	9.8	32.9	1.2
	부산	46	32.9	5.5	1.5	1.5	3.9	7.0	47.6	0.0
	대구	24	37.5	4.8	0.8	1.8	8.7	17.1	29.4	0.0
	인천	35	13.7	1.4	1.2	1.3	10.3	9.8	62.0	0.3
	광주	18	22.2	1.1	0.6	4.4	1.7	14.7	55.3	0.0
	대전	15	23.0	3.0	0.7	1.3	8.0	9.3	54.7	0.0
	울산	14	30.4	0.7	1.4	0.0	17.5	9.6	40.4	0.0
	경기	91	30.6	5.6	0.8	1.8	9.0	11.5	38.7	2.0
	강원	31	26.6	3.5	0.8	2.7	12.2	4.7	46.3	3.2
	충북	20	22.8	8.5	1.3	1.8	6.0	12.3	47.3	0.3
	충남(세종)	39	23.3	2.4	0.3	3.3	5.1	10.2	54.7	0.6
	전북	55	24.5	3.2	2.0	4.1	11.5	11.9	42.9	0.0

구분	사례수	B2C(소비자)					B2B 기업 계약	B2G 정부 계약	기타
		자체 매장	대형 온라인	직영 온라인	지역장 터	비대 면 창구			
전남	45	23.2	1.0	0.6	1.2	5.4	10.3	57.9	0.3
경북	31	21.4	3.6	1.1	2.0	9.4	4.4	58.2	0.0
경남	55	22.9	4.1	0.6	7.6	5.0	14.7	45.0	0.1
제주	18	54.4	3.1	1.4	1.9	5.0	10.3	23.9	0.0

2) 홍보 및 마케팅 활용

(1) 홍보 및 마케팅 활용방법

자활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 및 마케팅 방법은 블로그/카페를 활용하는 것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 홈페이지(22.8%), 카카오톡/밴드/라인(12.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자체홈페이지(60.0%)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중규모 이상의 기업(10-15인)에서는 신문/지면(23.1%)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할용·환경(87.5%), 사회서비스(71.9%) 업종은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기업 중 49.2%가 홍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업종 중 배송·운전(71.9%), 집수리(56.3%), 유통·판매(54.2%)가 홍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홍보필요성이 없음(58.0%), 홍보 가능 인력없음(20.2%), 홍보 방법을 모름(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단계의 기업 중 60.2%가 홍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업들의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3> 홍보 및 마케팅 방법(중복)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	카카 오	블로 그	라이브 커머스	유튜 브	페이 스북	신문	기타	안함	
전체	624	22.8	12.3	24.5	0.2	2.9	11.1	9.8	1.1	49.2	
생애 주기	시작단계	55	21.8	29.1	27.3	0.0	3.6	16.4	14.5	5.5	38.2
	생존단계	161	23.0	22.4	23.0	0.0	1.2	12.4	5.6	0.6	50.9
	성장단계	219	25.6	26.5	25.6	0.0	2.3	12.8	13.2	0.5	44.7
	성숙단계	101	23.8	25.7	25.7	1.0	5.0	6.9	5.9	1.0	52.5
	위기단계	88	14.8	20.5	21.6	0.0	4.5	5.7	10.2	1.1	60.2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2.0	11.0	28.0	0.0	3.0	14.0	9.8	0.6	45.7
	3인-5인 미만	256	19.1	12.9	21.5	0.0	2.3	9.8	9.0	0.8	53.5
	5인-10인 미만	163	23.9	12.9	22.7	0.6	3.7	9.8	9.2	1.2	50.9
	10인-15인 미만	18	44.4	5.6	33.3	0.0	0.0	11.1	22.2	5.6	27.8
	15인-30인 미만	13	30.8	15.4	30.8	0.0	7.7	15.4	23.1	7.7	38.5
인증 시기	30인 이상	10	60.0	20.0	50.0	0.0	0.0	10.0	0.0	0.0	20.0
	2010년 전	130	29.2	11.5	28.5	0.0	1.5	6.9	9.2	0.0	52.3
	2010년-2015	175	26.9	8.6	21.7	0.0	3.4	8.0	11.4	0.6	49.7

구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	카카오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페이스북	신문	기타	안함	
년											
	2016년-2020년	184	22.3	11.4	20.7	0.5	2.7	10.9	9.2	0.5	52.2
	2020년 후	135	11.9	19.3	29.6	0.0	3.7	19.3	8.9	3.7	41.5
사업자	개인	270	14.1	13.3	20.0	0.0	2.2	10.4	7.8	1.1	55.2
	법인	354	29.4	11.6	28.0	0.3	3.4	11.6	11.3	1.1	44.6
업종	생산·가공	109	22.9	14.7	22.9	0.9	2.8	18.3	8.3	0.0	46.8
	집수리	135	16.3	6.7	17.0	0.0	1.5	5.9	13.3	0.0	56.3
	세탁·청소	121	30.6	14.0	33.9	0.0	4.1	9.1	17.4	2.5	38.8
	배송·운전	96	18.8	9.4	4.2	0.0	1.0	3.1	4.2	0.0	71.9
	음식점	68	11.8	11.8	35.3	0.0	4.4	27.9	2.9	2.9	38.2
	유통·판매	48	16.7	14.6	20.8	0.0	0.0	4.2	6.3	2.1	54.2
	사회서비스	32	53.1	18.8	56.3	0.0	0.0	9.4	9.4	0.0	28.1
	재활용·환경	8	50.0	25.0	50.0	0.0	25.0	12.5	12.5	12.5	12.5
	기타	7	42.9	42.9	57.1	0.0	28.6	28.6	0.0	0.0	28.6
	소재지	서울	87	21.8	17.2	26.4	0.0	4.6	6.9	13.8	3.4
부산		46	15.2	6.5	28.3	0.0	4.3	19.6	10.9	0.0	52.2
대구		24	25.0	12.5	45.8	0.0	0.0	4.2	4.2	0.0	45.8
인천		35	37.1	5.7	25.7	0.0	2.9	5.7	2.9	0.0	48.6
광주		18	33.3	11.1	5.6	0.0	0.0	5.6	5.6	0.0	44.4
대전		15	13.3	6.7	6.7	0.0	0.0	20.0	6.7	6.7	60.0
울산		14	7.1	7.1	28.6	0.0	0.0	21.4	7.1	7.1	50.0
경기		91	36.3	12.1	29.7	0.0	2.2	9.9	8.8	1.1	46.2
강원		31	32.3	3.2	22.6	3.2	6.5	16.1	9.7	0.0	41.9
충북		20	35.0	35.0	40.0	0.0	0.0	20.0	10.0	0.0	35.0
충남(세종)		39	20.5	10.3	30.8	0.0	5.1	12.8	5.1	0.0	51.3
전북		55	12.7	18.2	18.2	0.0	1.8	3.6	12.7	0.0	54.5
전남		45	6.7	6.7	11.1	0.0	0.0	4.4	13.3	0.0	71.1
경북		31	19.4	16.1	29.0	0.0	3.2	16.1	3.2	0.0	45.2
경남		55	20.0	9.1	16.4	0.0	5.5	12.7	12.7	0.0	50.9
제주		18	16.7	22.2	22.2	0.0	0.0	27.8	16.7	5.6	44.4

4. 운영자금

1) 자금조달 방법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부정책자금(중소기업공단, 신용보증재단, 신보기금 등)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금융기관 대출(18.1%), 조합원 출자금(7.5%) 순으로 나타났다. 집수리(6.7%) 업종은 대표자 지인 등 개인차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53.7%가

자금을 대출받거나 조달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규모 이상(15-20인)의 기업에서 6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작단계의 자활기업 중 12.7%는 출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협동조합에서의 자금조달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표 14> 자활기업 자금조달 방법(중복응답)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없음	금융대출	정부자금	사회적금융	연대공제기금	출자금	후원금	타자활	개인차입	기타
전체	624	53.7	18.1	28.0	1.9	3.0	7.5	1.8	1.8	2.9	0.3
생애주기	시작단계	55	60.0	12.7	16.4	0.0	0.0	12.7	0.0	1.8	3.6
	생존단계	161	60.9	13.0	24.2	0.6	1.2	6.8	1.9	1.9	2.5
	성장단계	219	50.7	18.7	31.5	3.2	4.1	7.8	1.8	2.7	3.7
	성숙단계	101	47.5	21.8	31.7	4.0	5.9	7.9	3.0	0.0	2.0
	위기단계	88	51.1	25.0	29.5	0.0	2.3	4.5	1.1	1.1	3.4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55.5	14.6	31.1	1.8	1.2	4.3	0.6	1.2
3인-5인 미만	256	57.0	17.6	21.5	0.8	2.0	7.8	2.7	2.3	4.3	
5인-10인 미만	163	50.3	19.6	33.1	3.1	3.7	9.8	0.6	1.2	1.8	
10인-15인 미만	18	38.9	33.3	27.8	5.6	16.7	5.6	0.0	0.0	0.0	
15인-30인 미만	13	61.5	15.4	30.8	0.0	0.0	0.0	0.0	0.0	0.0	
30인 이상	10	10.0	40.0	60.0	10.0	30.0	30.0	20.0	10.0	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35.4	34.6	36.2	3.1	3.1	6.9	2.3	0.0	3.1
	2010년-2015년	175	53.7	21.7	31.4	2.3	5.7	5.7	1.7	2.3	2.9
	2016년-2020년	184	57.6	14.1	26.6	1.6	2.2	8.7	1.6	0.5	1.6
	2020년 후	135	65.9	3.0	17.8	0.7	0.7	8.9	1.5	4.4	4.4
사업자	개인	270	58.5	15.6	23.0	1.1	0.4	4.4	1.1	2.2	3.7
	법인	354	50.0	20.1	31.9	2.5	5.1	9.9	2.3	1.4	2.3
업종	생산·가공	109	55.0	20.2	31.2	0.9	4.6	4.6	1.8	0.0	3.7
	집수리	135	36.3	35.6	36.3	2.2	3.7	5.2	0.7	1.5	6.7
	세탁·청소	121	59.5	15.7	22.3	2.5	0.8	5.0	0.0	1.7	1.7
	배송·운전	96	65.6	9.4	21.9	1.0	3.1	7.3	1.0	3.1	0.0
	음식점	68	57.4	4.4	23.5	2.9	0.0	13.2	4.4	2.9	4.4
	유통·판매	48	56.3	10.4	27.1	0.0	4.2	12.5	2.1	2.1	0.0
	사회서비스	32	50.0	15.6	34.4	3.1	9.4	18.8	9.4	3.1	0.0
	재활용·환경	8	62.5	25.0	25.0	12.5	0.0	0.0	0.0	0.0	0.0
	기타	7	57.1	0.0	28.6	0.0	0.0	14.3	0.0	0.0	0.0
	소재지	서울	87	47.1	14.9	26.4	6.9	5.7	14.9	5.7	1.1
부산		46	47.8	17.4	32.6	2.2	2.2	8.7	4.3	4.3	0.0
대구		24	70.8	4.2	16.7	0.0	0.0	4.2	0.0	0.0	4.2
인천		35	60.0	20.0	25.7	2.9	2.9	0.0	0.0	2.9	2.9
광주		18	72.2	0.0	22.2	0.0	0.0	0.0	0.0	0.0	5.6

구분	사례수	없음	금융 대출	정부 자금	사회적 금융	연대 공제 기금	출자 금	후원 금	타자 활	개인 차입	기타
대전	15	40.0	6.7	33.3	6.7	6.7	13.3	0.0	0.0	13.3	0.0
울산	14	42.9	28.6	42.9	0.0	0.0	0.0	0.0	0.0	0.0	0.0
경기	91	54.9	17.6	25.3	1.1	1.1	5.5	0.0	5.5	2.2	0.0
강원	31	51.6	22.6	38.7	0.0	6.5	3.2	0.0	0.0	0.0	0.0
충북	20	60.0	20.0	25.0	0.0	5.0	5.0	5.0	0.0	0.0	0.0
충남(세종)	39	33.3	33.3	46.2	2.6	5.1	17.9	2.6	0.0	5.1	0.0
전북	55	54.5	25.5	23.6	1.8	5.5	5.5	1.8	1.8	3.6	0.0
전남	45	64.4	13.3	22.2	0.0	0.0	4.4	0.0	0.0	4.4	0.0
경북	31	48.4	25.8	22.6	0.0	0.0	12.9	3.2	0.0	0.0	3.2
경남	55	61.8	16.4	25.5	0.0	1.8	5.5	0.0	1.8	1.8	0.0
제주	18	55.6	11.1	38.9	0.0	5.6	5.6	0.0	0.0	5.6	0.0

2) 자금조달 용도

지난 3년간 조달한 자금의 용도는 운영자금/인건비(83.4%), 시설 및 공간자금(34.3%), 차입금 대환(6.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2020년 이후)에 인증받은 신생 자활기업이 시설 및 공간자금(46.3%)으로 자금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는 설비와 임차료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판매 업종에서는 운영자금(100%)으로, 생산·가공업종에서는 시설 및 공간자금(46.7%)으로 활용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자금용도(복수응답)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자금	차입금 대환	기타	
전체	277	83.4	34.3	6.5	3.2	
생애주기	시작단계	55	68.2	36.4	4.5	9.1
	생존단계	161	90.5	20.6	6.3	3.2
	성장단계	219	74.1	74.1	74.1	74.1
	성숙단계	101	79.2	43.4	1.9	3.8
	위기단계	88	86.0	32.6	11.6	0.0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70	85.7	32.9	7.1	2.9
	3인-5인 미만	103	85.4	30.1	5.8	4.9
	5인-10인 미만	79	86.1	35.4	6.3	0.0
	10인-15인 미만	11	72.7	45.5	9.1	9.1
	15인-30인 미만	5	80.0	60.0	0.0	0.0
30인 이상	9	33.3	55.6	11.1	11.1	
인증시기	2010년 전	80	82.5	28.8	8.8	2.5
	2010년-2015년	79	84.8	32.9	7.6	3.8
	2016년-2020년	77	84.4	35.1	5.2	3.9
	2020년 후	41	80.5	46.3	2.4	2.4

	구분	사례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자금	차입금 대환	기타
사업 자	개인	105	88.6	25.7	6.7	3.8
	법인	172	80.2	39.5	6.4	2.9
업 종	생산·가공	45	75.6	46.7	6.7	0.0
	집수리	81	95.1	23.5	9.9	3.7
	세탁·청소	48	79.2	27.1	6.3	6.3
	배송·운전	33	78.8	45.5	0.0	3.0
	음식점	27	85.2	37.0	0.0	0.0
	유통·판매	21	100.0	23.8	9.5	0.0
	사회서비스	16	50.0	50.0	6.3	12.5
	재활용·환경	3	66.7	66.7	33.3	0.0
	기타	3	66.7	66.7	0.0	0.0
	소 재 지	서울	44	86.4	36.4	13.6
부산		24	87.5	33.3	12.5	8.3
대구		6	83.3	33.3	0.0	0.0
인천		13	84.6	38.5	0.0	0.0
광주		4	50.0	75.0	0.0	0.0
대전		7	71.4	28.6	0.0	14.3
울산		8	100.0	25.0	12.5	0.0
경기		39	76.9	38.5	2.6	2.6
강원		15	80.0	33.3	0.0	6.7
충북		8	75.0	50.0	0.0	12.5
충남(세종)		26	84.6	30.8	7.7	3.8
전북		24	75.0	37.5	16.7	0.0
전남		15	100.0	0.0	0.0	6.7
경북		16	81.3	37.5	0.0	0.0
경남		21	95.2	23.8	0.0	4.8
제주		7	71.4	71.4	14.3	0.0

3) 자금조달 규모

지난 3년간 조달 한 자금 규모는 평균 약 1억 4천 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운영자금이 140.3백만원, 시설 및 공간 자금 78.7백만원, 차입금 26.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 사회서비스의 경우 시설 및 공간자금으로 활용한 금액이 160.4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과 강원에서 시설 및 공간 자금으로 각각 200.0백만원, 181.6백만원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작단계의 자활기업에서 181.9백만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운영 시작에 필요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16> 자금규모(복수응답)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례수	합계 평균	종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	차입금	기타
	전체	245	146.6	140.3	78.7	26.9	48.0
생애주기	시작단계	55	181.9	217.7	60.4	70.0	1.0
	생존단계	161	167.0	162.5	63.7	20.3	9.5
	성장단계	219	131.9	118.8	101.1	26.0	105.0
	성숙단계	101	122.9	111.9	67.3	50.0	19.5
	위기단계	88	165.9	153.2	61.8	20.2	-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64	148.1	147.4	59.5	30.0
	3인-5인 미만	92	135.0	133.0	55.6	31.8	69.0
	5인-10인 미만	69	163.1	150.4	90.6	23.2	-
	10인-15인 미만	10	127.3	125.4	77.2	10.0	1.0
	15인-30인 미만	3	212.0	115.0	200.0	-	-
	30인 이상	7	113.3	53.3	168.4	17.0	1.0
인증시기	2010년 전	70	117.2	100.0	110.4	30.0	12.5
	2010년-2015년	69	171.1	161.9	96.2	23.0	9.7
	2016년-2020년	67	158.6	162.8	54.8	33.8	25.3
	2020년 후	39	134.7	132.5	49.1	1.0	175.0
사업자	개인	98	115.0	116.1	38.0	24.3	32.3
	법인	147	165.8	156.6	94.3	28.6	58.5
업종	생산·가공	40	174.7	165.9	102.7	21.7	30.0
	집수리	68	157.5	134.6	107.6	31.9	5.0
	세탁·청소	45	139.3	155.9	52.6	22.0	50.0
	배송·운전	32	104.1	109.6	35.7	-	-
	음식점	23	115.5	121.7	35.7	-	-
	유통·판매	19	196.4	172.8	65.4	33.0	300.0
	사회서비스	12	142.2	118.8	160.4	17.0	12.5
	재활용·환경	3	75.3	90.0	15.5	15.0	-
	기타	3	28.3	35.0	7.5	-	-
소재지	서울	41	120.3	109.6	48.4	28.8	300.0
	부산	21	143.0	141.4	43.6	17.0	32.0
	대구	6	93.3	84.0	69.9	-	-
	인천	9	179.2	120.9	200.0	-	-
	광주	4	197.8	347.0	32.3	-	-
	대전	6	164.9	206.6	60.0	-	1.0
	울산	7	180.3	175.9	7.5	20.0	-
	경기	31	187.1	204.5	73.8	45.0	10.0
	강원	14	125.6	77.2	181.6	-	50.0

구분	사례수	합계 평균	종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	차입금	기타
충북	7	138.8	119.7	92.0	-	24.0
충남(세종)	24	146.7	155.3	37.7	60.0	15.0
전북	23	103.5	84.9	99.0	16.3	-
전남	14	65.4	64.4	-	-	15.0
경북	14	109.1	108.2	56.7	-	-
경남	19	200.1	189.8	80.8	-	1.0
제주	5	302.9	298.0	124.0	10.0	-

4) 자금조달 시 문제점

자금을 조달하며 느낀 가장 어려운 점은 제출서류 구비(16.3%), 높은이자(14.7%),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 입증(12.7%), 담보 및 보증 부담(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는 제출서류 구비(19.6%)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16.1%)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자금 조달 어려운점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제출 서류	높은 이자	소요 시간	담보부 담	가치 입증	상환 기간	기타	없음	
전체	624	16.3	14.7	1.0	11.5	12.7	4.0	1.9	37.8	
생애 주기	시작단계	55	23.6	10.9	1.8	1.8	20.0	0.0	0.0	41.8
	생존단계	161	18.6	10.6	1.2	11.8	14.9	5.0	1.9	36.0
	성장단계	219	16.4	15.5	0.5	14.6	10.5	3.7	1.4	37.4
	성숙단계	101	4.0	24.8	2.0	12.9	8.9	6.9	0.0	40.6
	위기단계	88	21.6	11.4	0.0	8.0	13.6	2.3	6.8	36.4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19.5	12.2	0.6	7.9	10.4	3.7	0.6	45.1
	3인-5인 미만	256	15.6	15.6	0.4	13.3	12.9	4.3	2.0	35.9
	5인-10인 미만	163	15.3	12.9	2.5	12.3	15.3	3.1	2.5	36.2
	10인-15인 미만	18	16.7	27.8	0.0	11.1	11.1	0.0	11.1	22.2
	15인-30인 미만	13	7.7	15.4	0.0	15.4	7.7	0.0	0.0	53.8
	30인 이상	10	10.0	40.0	0.0	10.0	10.0	30.0	0.0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15.4	23.1	0.8	13.1	10.8	6.2	0.0	30.8
	2010년-2015년	175	12.0	21.1	0.6	10.3	13.7	4.0	2.3	36.0
	2016년-2020년	184	17.4	10.9	1.1	14.1	9.8	2.7	3.8	40.2
사업 자	2020년 후	135	21.5	3.7	1.5	8.1	17.0	3.7	0.7	43.7
	개인	270	19.6	14.1	0.7	10.0	8.1	4.4	1.5	41.5
	법인	354	13.8	15.3	1.1	12.7	16.1	3.7	2.3	35.0
업종	생산·가공	109	11.0	14.7	0.0	16.5	10.1	3.7	2.8	41.3

구분	사례수	제출 서류	높은 이자	소요 시간	담보부 담	가치 입증	상환 기간	기타	없음	
집수리	135	14.1	25.9	0.7	11.1	17.0	5.2	1.5	24.4	
세탁·청소	121	22.3	11.6	0.8	10.7	12.4	3.3	0.8	38.0	
배송·운전	96	14.6	9.4	2.1	12.5	12.5	1.0	0.0	47.9	
음식점	68	19.1	7.4	1.5	7.4	8.8	5.9	4.4	45.6	
유통·판매	48	20.8	14.6	0.0	10.4	8.3	2.1	4.2	39.6	
사회서비스	32	12.5	18.8	3.1	6.3	15.6	6.3	0.0	37.5	
재활용·환경	8	0.0	0.0	0.0	12.5	37.5	12.5	12.5	25.0	
기타	7	42.9	0.0	0.0	14.3	0.0	14.3	0.0	28.6	
서울	87	14.9	11.5	1.1	8.0	13.8	6.9	2.3	41.4	
부산	46	30.4	8.7	2.2	10.9	6.5	2.2	4.3	34.8	
대구	24	25.0	12.5	0.0	8.3	16.7	0.0	0.0	37.5	
인천	35	2.9	25.7	2.9	14.3	17.1	2.9	2.9	31.4	
광주	18	11.1	0.0	0.0	5.6	11.1	5.6	5.6	61.1	
대전	15	26.7	13.3	0.0	6.7	20.0	0.0	0.0	33.3	
울산	14	7.1	21.4	0.0	7.1	14.3	14.3	0.0	35.7	
소재지	경기	91	22.0	16.5	1.1	9.9	12.1	3.3	2.2	33.0
강원	31	12.9	12.9	0.0	19.4	6.5	6.5	3.2	38.7	
충북	20	10.0	25.0	0.0	25.0	0.0	0.0	0.0	40.0	
충남(세종)	39	12.8	23.1	0.0	12.8	17.9	7.7	2.6	23.1	
전북	55	20.0	12.7	0.0	10.9	16.4	3.6	0.0	36.4	
전남	45	11.1	17.8	2.2	11.1	6.7	4.4	0.0	46.7	
경북	31	12.9	22.6	0.0	16.1	6.5	0.0	0.0	41.9	
경남	55	12.7	9.1	1.8	7.3	21.8	3.6	1.8	41.8	
제주	18	16.7	5.6	0.0	27.8	5.6	0.0	5.6	38.9	

5. 자원연계

1) 자활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1) 네트워크 경험

자활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0.5%가 협력경험이 있으며,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58.5%), 다른 자활기업과 협력(49.5%),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43.3%), 사회복지시설과 협력(43.1%)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이 협력경험(71.1%)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개인사업자가 협력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4.8%). 반면 법인사업자는 협력경험이 낮지만, 협력을 한다면 민간기업(29.1%)과 협력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집수리(83.7%) 업종은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한 경험이 매우 높으며, 사회서비스업(75.0%)은 다른 자활기업과의 협력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숙단계의 자활기업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 수행경험이 34.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성장과 성숙단계에서 중요한 협력조직으로 볼 수 있다.

<표 18> 타조직과 협력사업 수행경험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협력기관(중복응답)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시설	민간기업	
전체	624	50.5	49.5	43.3	58.5	43.1	24.2	
생애 주기	시작단계	55	38.2	29.1	49.1	36.4	16.4	
	생존단계	161	39.1	41.0	54.0	39.1	18.6	
	성장단계	219	56.2	46.1	63.9	46.1	26.9	
	성숙단계	101	59.4	50.5	68.3	50.5	34.7	
	위기단계	88	47.7	40.9	47.7	38.6	20.5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54.9	45.1	39.6	57.9	39.0
3인-5인 미만	256	55.1	44.9	37.5	57.0	39.5	20.7	
5인-10인 미만	163	47.9	52.1	47.9	58.9	47.2	28.2	
10인-15인 미만	18	16.7	83.3	77.8	72.2	72.2	50.0	
15인-30인 미만	13	15.4	84.6	69.2	76.9	69.2	38.5	
30인 이상	10	10.0	90.0	80.0	50.0	50.0	2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8.5	61.5	57.7	66.2	62.3	33.8
	2010년-2015년	175	35.4	64.6	52.6	65.7	42.3	28.0
	2016년-2020년	184	58.2	41.8	37.0	54.3	37.5	19.6
	2020년 후	135	71.1	28.9	25.9	47.4	33.3	16.3
사업자	개인	270	64.8	35.2	28.1	47.0	33.0	17.8
	법인	354	39.5	60.5	54.8	67.2	50.8	29.1
업종	생산·가공	109	54.1	45.9	40.4	45.0	37.6	29.4
	집수리	135	38.5	61.5	57.0	83.7	60.7	30.4
	세탁·청소	121	38.0	62.0	49.6	58.7	57.9	31.4
	배송·운전	96	57.3	42.7	32.3	67.7	21.9	15.6
	음식점	68	73.5	26.5	26.5	39.7	30.9	10.3
	유통·판매	48	77.1	22.9	27.1	29.2	18.8	16.7
	사회서비스	32	25.0	75.0	62.5	53.1	56.3	21.9
	재활용·환경	8	50.0	50.0	37.5	62.5	25.0	12.5
	기타	7	57.1	42.9	57.1	57.1	71.4	28.6
	소재 지	서울	87	48.3	51.7	43.7	57.5	41.4
부산		46	56.5	43.5	37.0	52.2	43.5	17.4
대구		24	79.2	20.8	29.2	37.5	33.3	4.2
인천		35	34.3	65.7	54.3	68.6	51.4	20.0
광주		18	66.7	33.3	33.3	55.6	27.8	11.1
대전		15	26.7	73.3	60.0	80.0	60.0	13.3
울산		14	35.7	64.3	35.7	42.9	35.7	28.6
경기		91	37.4	62.6	50.5	63.7	50.5	31.9
강원		31	48.4	51.6	38.7	67.7	51.6	25.8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협력기관(중복응답)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시설	민간기업
충북	20	45.0	55.0	50.0	55.0	50.0	45.0
충남(세종)	39	43.6	56.4	53.8	64.1	41.0	30.8
전북	55	50.9	49.1	49.1	54.5	43.6	25.5
전남	45	66.7	33.3	22.2	57.8	28.9	22.2
경북	31	51.6	48.4	41.9	61.3	41.9	29.0
경남	55	67.3	32.7	40.0	60.0	38.2	21.8
제주	18	50.0	50.0	44.4	38.9	50.0	22.2

(2) 네트워크 연계정도

협력한 기관과의 연계정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기준으로 지자체·공공기관 2.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자활기업(2.5점), 타 사회적경제조직(2.5점), 사회복지시설(2.4점), 민간기업(2.1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협력의 경험은 낮지만 협력한 경우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자활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수준을 2.6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집수리(3.0점), 배송·운전(3.0점) 업종은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경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단계 및 성숙단계의 민간기업과의 연계정도는 2.2점으로 타 조직 협력사업 연계정도와는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정도가 2.7점으로 높은 것을 주목해 볼 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이루어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9> 타조직과 협력사업 연계 정도(4점만점)

구분		(단위: 개, 점)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시설		민간기업	
		n	점	n	점	n	점	n	점	n	점
전체		309	2.5	270	2.5	365	2.8	269	2.4	151	2.1
생애주 기	시작단계	21	2.3	16	2.3	27	2.9	20	2.5	9	2.0
	생존단계	63	2.3	66	2.3	87	2.7	63	2.4	30	2.0
	성장단계	123	2.6	101	2.7	140	2.8	101	2.4	59	2.2
	성숙단계	60	2.7	51	2.6	69	2.9	51	2.3	35	2.2
	위기단계	42	2.3	36	2.4	42	2.5	34	2.3	18	2.1
	기업규 모	1인-3인 미만	74	2.3	65	2.5	95	2.8	64	2.4	36
3인-5인 미만		115	2.5	96	2.5	146	2.7	101	2.3	53	2.1
5인-10인 미만		85	2.5	78	2.5	96	2.9	77	2.4	46	2.0
10인-15인 미만		15	2.7	14	2.7	13	2.8	13	2.5	9	1.9
15인-30인 미만		11	2.8	9	2.4	10	2.9	9	2.4	5	2.8
30인 이상		9	3.1	8	3.0	5	2.8	5	3.2	2	2.0
인증 시기	2010년 전	80	2.6	75	2.6	86	2.9	81	2.4	44	2.0
	2010년-2015년	113	2.5	92	2.6	115	2.8	74	2.3	49	2.1
	2016년-2020년	77	2.3	68	2.4	100	2.7	69	2.5	36	2.2

구분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n	점	n	점	n	점	n	점	n	점	
2020년 후	39	2.7	35	2.5	64	2.8	45	2.3	22	2.1	
사업자	개인	95	2.2	76	2.3	127	2.7	89	2.3	48	2.0
	법인	214	2.6	194	2.6	238	2.8	180	2.4	103	2.1
업종	생산·가공	50	2.6	44	2.9	49	2.8	41	2.5	32	2.5
	집수리	83	2.6	77	2.6	113	3.0	82	2.4	41	1.8
	세탁·청소	75	2.4	60	2.5	71	2.7	70	2.2	38	2.0
	배송·운전	41	2.6	31	2.5	65	3.0	21	2.5	15	2.3
	음식점	18	2.2	18	2.3	27	2.4	21	2.4	7	2.0
	유통·판매	11	2.1	13	1.8	14	2.0	9	2.0	8	1.6
	사회서비스	24	2.7	20	2.6	17	2.5	18	2.4	7	2.7
	재활용·환경	4	3.0	3	2.7	5	2.4	2	1.5	1	1.0
	기타	3	1.7	4	2.0	4	2.8	5	2.4	2	2.0
	소재지	서울	45	2.4	38	2.6	50	2.6	36	2.2	20
부산		20	2.6	17	2.6	24	2.8	20	2.5	8	1.8
대구		5	2.2	7	2.3	9	2.8	8	2.4	1	3.0
인천		23	2.5	19	2.6	24	2.8	18	2.3	7	1.4
광주		6	3.0	6	3.0	10	3.0	5	3.0	2	2.5
대전		11	2.4	9	2.8	12	2.8	9	2.1	2	2.0
울산		9	2.8	5	2.6	6	3.2	5	3.2	4	2.3
경기		57	2.5	46	2.4	58	2.7	46	2.2	29	1.9
강원		16	2.6	12	2.5	21	2.7	16	2.4	8	2.6
충북		11	2.6	10	2.6	11	2.6	10	2.5	9	2.3
충남(세종)		22	2.8	21	2.8	25	2.8	16	2.5	12	2.4
전북		27	2.7	27	2.5	30	2.8	24	2.4	14	2.1
전남		15	2.4	10	2.4	26	2.9	13	2.4	10	2.3
경북		15	2.3	13	2.4	19	3.1	13	2.5	9	1.9
경남		18	2.2	22	2.2	33	2.8	21	2.4	12	2.5
제주		9	2.3	8	2.8	7	2.7	9	2.4	4	2.3

2)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자활기업이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지원받은 지원제도와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다. 자활기업의 67.0%는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40.2%), 컨설팅(35.9%), 인프라지원(35.7%)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한 도움정도는 4.6점(5점만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육, 컨설팅, 인프라 지원에 대한 도움정도는 각각 4.0점, 4.0점, 4.5점으로 나타나 도움 정도에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에 지원경험(29.8%)이 높았으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프라 지원(41.7%)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활기업의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경험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달랐으며 시작단계에서 공간의 도움정도가 컸으며, 생존단

계에서 인건비지원, 성장단계에서 사업개발비원, 성숙단계에서 인프라 지원 등이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단계별 필요 지원사업이 다를 수 있다.

<표 20> 최근 3년간 외부 지원 받은 경험(중복) 및 도움정도(5점)

(단위 : 개, %, 점)

구분	사례 수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유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전체	594	67.0	4.6	29.1	4.5	35.9	4.0	40.2	4.0	20.0	4.3	35.7	4.5	11.6	4.4	
생애주기	시작단계	55	45.5	4.5	23.6	4.5	29.1	4.1	27.3	4.2	25.5	4.6	29.1	4.6	5.5	4.7
	생존단계	161	67.7	4.7	28.6	4.6	34.2	3.9	41.6	3.8	23.0	4.4	34.2	4.5	6.2	4.0
	성장단계	219	67.1	4.7	31.1	4.7	37.4	4.3	38.8	4.3	19.6	4.5	37.0	4.5	14.6	4.6
	성숙단계	101	59.4	4.7	24.8	4.5	35.6	3.9	34.7	4.1	7.9	4.8	36.6	4.7	13.9	4.5
	위기단계	88	64.8	4.4	23.9	3.5	27.3	3.5	42.0	3.5	19.3	3.4	26.1	3.9	11.4	3.5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57	60.5	4.7	26.8	4.4	31.8	4.0	41.4	3.9	17.8	4.3	33.8	4.5	8.9
	3인-5인 미만	238	70.6	4.7	29.8	4.6	36.1	4.1	42.0	4.1	20.2	4.1	31.1	4.3	12.2	4.3
	5인-10인 미만	159	68.6	4.5	28.3	4.5	39.0	4.0	38.4	3.9	22.0	4.7	46.5	4.6	10.7	4.3
	10인-15인 미만	18	61.1	5.0	38.9	4.9	38.9	4.3	27.8	4.2	11.1	4.5	22.2	4.8	16.7	4.7
	15인-30인 미만	12	58.3	4.6	16.7	5.0	33.3	4.0	25.0	4.7	33.3	4.0	41.7	4.6	16.7	4.5
	30인 이상	10	80.0	4.8	60.0	4.0	40.0	2.5	50.0	3.6	20.0	4.0	20.0	4.0	40.0	5.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51.5	4.7	23.8	4.5	30.8	4.1	29.2	4.3	10.8	4.1	37.7	4.5	10.8	4.4
	2010년-2015년	175	53.7	4.6	26.9	4.5	28.6	3.8	39.4	3.6	11.4	4.1	25.7	4.4	10.3	4.1
	2016년-2020년	184	81.0	4.6	28.8	4.5	38.0	3.9	41.8	3.8	23.9	4.2	35.9	4.4	9.8	4.1
	2020년 후	105	83.8	4.8	40.0	4.6	50.5	4.3	52.4	4.5	39.0	4.7	49.5	4.7	18.1	4.9
사업자	개인	254	62.2	4.6	22.0	4.3	29.1	3.9	44.5	3.9	20.5	4.1	31.5	4.4	10.6	4.0
	법인	340	70.6	4.7	34.4	4.6	40.9	4.1	37.1	4.0	19.7	4.5	38.8	4.5	12.4	4.6
업종	생산·가공	108	72.2	4.7	31.5	4.4	35.2	4.0	38.9	3.9	27.8	4.3	38.9	4.4	15.7	4.1
	집수리	131	53.4	4.5	23.7	4.5	34.4	3.8	33.6	3.9	6.1	4.5	26.7	4.6	11.5	4.4
	세탁·청소	114	70.2	4.6	35.1	4.5	38.6	4.2	43.9	4.2	23.7	4.3	47.4	4.5	7.9	4.1
	배송·운전	95	68.4	4.8	21.1	4.6	29.5	3.9	42.1	4.0	17.9	4.2	31.6	4.3	9.5	4.1
	음식점	57	75.4	4.6	35.1	4.6	56.1	4.1	45.6	3.9	29.8	4.5	47.4	4.5	12.3	4.7
	유통·판매	43	79.1	4.7	27.9	4.3	37.2	3.9	48.8	4.1	27.9	4.3	23.3	4.4	14.0	4.5
	사회서비스	32	59.4	4.9	34.4	4.7	28.1	4.1	28.1	3.6	21.9	4.3	28.1	4.6	18.8	5.0
	재활용·환경	8	62.5	4.2	37.5	4.3	12.5	5.0	37.5	3.7	12.5	3.0	25.0	5.0	0.0	.
	기타	6	66.7	5.0	33.3	5.0	0.0	.	66.7	3.8	0.0	.	50.0	4.3	0.0	.
	소재지	서울	81	70.4	4.8	32.1	4.4	23.5	4.0	43.2	4.2	23.5	4.3	44.4	4.4	7.4
부산		42	57.1	4.5	28.6	4.4	40.5	3.5	50.0	3.4	16.7	4.1	31.0	4.4	9.5	4.0
대구		21	66.7	4.9	28.6	4.5	42.9	3.6	23.8	4.6	23.8	4.6	19.0	5.0	9.5	5.0

구분	사례 수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유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인천	34	67.6	4.7	44.1	4.9	44.1	3.7	20.6	3.6	17.6	4.2	41.2	4.7	8.8	4.7
광주	18	72.2	5.0	27.8	5.0	22.2	3.8	33.3	5.0	16.7	3.7	27.8	4.4	5.6	3.0
대전	15	60.0	4.8	33.3	4.6	66.7	3.9	66.7	4.1	26.7	4.8	46.7	4.6	6.7	5.0
울산	12	75.0	4.2	50.0	3.8	58.3	4.3	58.3	4.3	8.3	4.0	41.7	4.6	16.7	4.0
경기	87	75.9	4.7	29.9	4.4	41.4	4.3	55.2	4.0	17.2	4.1	35.6	4.3	14.9	3.9
강원	28	50.0	4.6	32.1	4.4	39.3	4.0	42.9	4.3	25.0	4.7	32.1	4.9	35.7	4.5
충북	19	68.4	4.8	21.1	4.8	42.1	4.4	36.8	3.7	15.8	4.3	57.9	4.6	10.5	5.0
충남(세종)	39	76.9	4.7	38.5	4.7	61.5	4.3	41.0	4.1	12.8	5.0	38.5	4.6	15.4	5.0
전북	53	52.8	4.4	17.0	4.0	22.6	3.8	39.6	3.9	13.2	3.9	34.0	4.3	15.1	4.1
전남	44	59.1	4.5	22.7	5.0	27.3	4.0	20.5	3.6	6.8	5.0	25.0	4.7	11.4	4.6
경북	29	58.6	4.5	34.5	4.4	31.0	4.0	37.9	3.9	20.7	4.3	31.0	4.3	3.4	4.0
경남	55	74.5	4.5	14.5	3.9	27.3	4.0	32.7	3.9	29.1	3.9	29.1	4.2	7.3	3.5
제주	17	82.4	4.8	41.2	4.9	29.4	4.0	35.3	4.0	70.6	4.8	47.1	5.0	5.9	5.0

주 : 2023년 창업한 자활기업은 제외

3)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점

자활기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력확보가 76.9점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자금조달 73.6점, 경영방법 66.8점, 판로 6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 업종은 자금조달(79.7점)을 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업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단계 기업은 현재 자금조달,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단계의 기업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자금조달 등의 2차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100점 기준)

(단위 : 개, 점)

구분	사례 수	자금 조달	기술향상	인력 확보	사업 장위치	판로	행정 절차	경영방법	기타
전체	624	73.6	58.2	76.9	59.1	63.9	61.2	66.8	89.7
시작단계	55	79.3	68.4	80.7	70.2	71.3	67.3	75.6	80.0
생존단계	161	81.2	69.2	81.7	68.9	73.0	70.4	75.4	-
성장단계	219	75.3	66.3	81.4	65.3	69.6	68.9	71.5	-
성숙단계	101	76.4	63.4	81.0	66.3	67.3	67.9	70.3	100.0
위기단계	88	85.9	65.0	82.5	68.6	75.9	68.9	77.0	80.0
1인-3인 미만	164	73.2	57.2	76.7	58.5	64.5	62.2	67.5	75.0
3인-5인 미만	256	75.9	57.0	76.4	60.1	63.1	61.9	67.3	90.0
5인-10인 미만	163	71.3	59.5	77.5	58.1	64.3	59.4	65.0	91.7
10인-15인 미만	18	66.7	62.5	76.4	51.4	69.4	62.5	66.7	100.0
15인-30인 미만	13	69.2	63.5	80.8	59.6	63.5	51.9	69.2	-
30인 이상	10	75.0	70.0	80.0	75.0	62.5	67.5	70.0	75.0

	구분	사례수	자금 조달	기술향상	인력 확보	사업장위치	판로	행정 절차	경영방법	기타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71.4	58.5	78.5	56.0	65.6	62.1	67.9	85.0
	2010년-2015년	175	76.3	58.1	76.9	58.4	65.3	63.3	66.3	96.4
	2016년-2020년	184	74.2	60.3	77.9	59.8	64.0	60.3	66.4	85.0
	2020년 후	135	71.3	55.2	74.1	62.2	60.6	58.9	67.0	-
사업자	개인	270	74.4	56.1	75.8	58.8	61.9	61.3	65.0	85.0
	법인	354	72.9	59.8	77.7	59.4	65.5	61.2	68.2	91.7
업종	생산·가공	109	74.3	59.2	78.2	59.6	63.5	61.0	64.2	95.0
	집수리	135	76.5	61.7	79.3	54.3	62.8	60.4	67.2	89.3
	세탁·청소	121	71.9	57.0	75.0	57.4	70.9	62.4	70.0	-
	배송·운전	96	68.5	58.9	79.4	59.1	59.6	58.9	64.3	83.3
	음식점	68	71.7	52.9	72.1	63.2	63.2	62.1	68.8	-
	유통·판매	48	79.7	53.1	76.0	63.5	57.3	60.4	60.4	-
	사회서비스	32	66.4	63.3	76.6	65.6	66.4	62.5	73.4	87.5
	재활용·환경	8	90.6	50.0	68.8	65.6	75.0	75.0	68.8	-
	기타	7	92.9	60.7	71.4	67.9	60.7	67.9	71.4	-
소재지	서울	87	73.9	54.0	74.7	62.9	65.5	59.5	67.5	-
	부산	46	76.6	53.8	71.7	57.6	57.1	59.2	65.8	-
	대구	24	75.0	66.7	74.0	62.5	69.8	69.8	75.0	-
	인천	35	73.6	64.3	77.9	53.6	64.3	55.0	64.3	83.3
	광주	18	68.1	50.0	76.4	58.3	58.3	56.9	56.9	-
	대전	15	75.0	51.7	76.7	60.0	70.0	66.7	73.3	-
	울산	14	76.8	60.7	76.8	57.1	80.4	66.1	73.2	-
	경기	91	75.8	57.7	78.6	59.1	66.2	64.8	67.3	87.5
	강원	31	77.4	56.5	72.6	63.7	64.5	63.7	62.9	-
	충북	20	65.0	53.8	70.0	50.0	63.8	47.5	60.0	75.0
	충남(세종)	39	75.6	58.3	82.1	59.6	64.7	60.9	67.3	100.0
	전북	55	73.2	59.6	80.0	59.1	61.8	60.9	65.5	100.0
	전남	45	72.8	63.3	80.6	56.7	60.0	59.4	71.7	91.7
	경북	31	71.0	55.7	83.1	64.5	59.7	63.7	64.5	-
	경남	55	69.1	62.7	75.5	57.7	63.6	63.2	69.6	91.7
	제주	18	72.2	62.5	73.6	55.6	63.9	59.7	58.3	-

4)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 정책

자활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85.3%)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인프라 지원(56.1%), 사업개발비(50.5%), 공간/임대 지원(46.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5-10인 규모인 경우 인프라 지원(61.3%)을 희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인증받은 기업인 경우 컨설팅 지원(21.5%)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 업종은 모든 기업이 인건비 지원(100%)을 희망하였으며, 집수리 업종은 투자·용자 지원(42.2%)을 희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존단계의 기업은 인건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단계의 기업은 컨설팅 등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필요한 지원정책은 다를 것이며 맞춤형 지원을 계획할 때 생애주기별로 구간을 나누어 집중지원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22> 우선지원 정책(1+2+3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유자	기타	
전체	624	85.3	50.5	14.9	15.2	46.8	56.1	28.7	2.6	
생애주기	시작단계	55	89.1	47.3	14.5	21.8	47.3	49.1	29.1	1.8
	생존단계	161	91.3	49.1	13.7	13.0	50.3	52.2	29.2	1.2
	성장단계	219	82.6	54.3	14.6	15.1	47.5	58.9	25.1	1.8
	성숙단계	101	78.2	48.5	12.9	14.9	36.6	64.4	41.6	3.0
	위기단계	88	86.4	47.7	20.5	15.9	50.0	51.1	21.6	6.8
	기업규모	1인-3인 미만	164	89.0	54.3	11.6	13.4	47.0	55.5	28.0
3인-5인 미만	256	86.3	50.8	15.2	17.2	45.3	52.7	28.9	3.5	
5인-10인 미만	163	81.0	43.6	18.4	17.2	47.9	61.3	29.4	1.2	
10인-15인 미만	18	83.3	72.2	5.6	5.6	44.4	61.1	22.2	5.6	
15인-30인 미만	13	92.3	38.5	30.8	-	46.2	69.2	15.4	7.7	
30인 이상	10	60.0	70.0	-	-	70.0	40.0	50.0	10.0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79.2	46.2	12.3	11.5	48.5	63.8	36.9	1.5
	2010년-2015년	175	83.4	50.3	10.9	18.9	46.9	56.6	29.7	3.4
	2016년-2020년	184	90.8	53.3	15.8	14.7	47.3	52.2	22.8	3.3
	2020년 후	135	85.9	51.1	21.5	14.8	44.4	53.3	27.4	1.5
사업자	개인	270	84.8	48.9	18.5	16.3	47.8	50.7	30.0	3.0
	법인	354	85.6	51.7	12.1	14.4	46.0	60.2	27.7	2.3
업종	생산·가공	109	80.7	49.5	14.7	10.1	50.5	61.5	33.0	-
	집수리	135	84.4	37.8	7.4	17.8	45.9	63.0	42.2	1.5
	세탁·청소	121	85.1	57.0	19.8	19.8	39.7	59.5	15.7	3.3
	배송·운전	96	84.4	47.9	15.6	15.6	50.0	62.5	19.8	4.2
	음식점	68	88.2	60.3	19.1	7.4	45.6	57.4	20.6	1.5
	유통·판매	48	100.0	50.0	18.8	18.8	41.7	27.1	35.4	8.3
	사회서비스	32	81.3	59.4	15.6	18.8	59.4	28.1	34.4	3.1
	재활용·환경	8	87.5	75.0	12.5	-	62.5	12.5	50.0	-
	기타	7	71.4	71.4	-	14.3	57.1	57.1	28.6	-
소재지	서울	87	93.1	57.5	13.8	16.1	54.0	39.1	23.0	3.4
	부산	46	84.8	58.7	17.4	17.4	39.1	45.7	30.4	6.5
	대구	24	95.8	58.3	16.7	4.2	41.7	50.0	33.3	-
	인천	35	77.1	45.7	20.0	17.1	42.9	68.6	17.1	11.4
	광주	18	83.3	44.4	16.7	5.6	44.4	72.2	33.3	-
	대전	15	73.3	40.0	6.7	13.3	60.0	73.3	33.3	-
	울산	14	85.7	64.3	7.1	7.1	57.1	50.0	28.6	-
	경기	91	87.9	56.0	12.1	17.6	45.1	49.5	30.8	1.1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개발비	건설터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유자	기타
강원	31	87.1	51.6	9.7	6.5	51.6	67.7	25.8	-
충북	20	75.0	50.0	30.0	20.0	45.0	50.0	30.0	-
충남(세종)	39	84.6	41.0	10.3	15.4	38.5	56.4	51.3	2.6
전북	55	80.0	41.8	12.7	10.9	56.4	67.3	30.9	-
전남	45	84.4	53.3	22.2	17.8	35.6	57.8	22.2	6.7
경북	31	74.2	61.3	19.4	19.4	38.7	58.1	29.0	-
경남	55	87.3	34.5	14.5	20.0	49.1	70.9	21.8	1.8
제주	18	88.9	38.9	11.1	16.7	55.6	55.6	33.3	-

6. 공간

1) 임대료 수준

자활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평균 2,976만원, 월세 평균 8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3,327만원)과 월세(94만원)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시의 경우 보증금 5,013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보증금과 월세

(단위 : 개, 만원, %)

구분	사 례 수	보증금						월세					
		평균	1천 만	1-2 천만	2-3 천만	3-5 천만	5천 이상	평균	30만	30- 50만	50- 100 만	100 만 이상	
전체	399	2,976	23.8	22.1	18.8	15.5	19.8	88	11.8	20.6	38.6	29.1	
생 애 주 기	시작단계	28	2,833	14.3	42.9	14.3	17.9	10.7	104	10.7	17.9	35.7	35.7
	생존단계	97	2,744	26.8	36.1	11.3	13.4	12.4	72	21.6	24.7	34.0	19.6
	성장단계	153	2,947	19.6	42.5	15.0	13.1	9.8	102	17.0	20.3	33.3	29.4
	성숙단계	57	3,260	24.6	47.4	7.0	8.8	12.3	83	12.3	35.1	31.6	21.1
	위기단계	64	3,209	32.8	26.6	12.5	15.6	12.5	73	26.6	20.3	31.3	21.9
기 업 규 모	1인-3인 미만	114	2,455	26.3	22.8	17.5	14.9	18.4	76	12.3	25.4	38.6	23.7
	3인-5인 미만	164	2,881	23.8	22.6	21.3	17.7	14.6	88	12.8	18.3	37.8	31.1
	5인-10인 미만	98	2,931	20.4	23.5	18.4	14.3	23.5	92	7.1	20.4	43.9	28.6
	10인-15인 미만	10	4,070	30.0	10.0	10.0	10.0	40.0	90	30.0	10.0	20.0	40.0
	15인-30인	8	5,538	25.0	0.0	12.5	12.5	50.0	83	12.5	25.0	25.0	37.5

구분	사 례 수	보증금						월세					
		평균	1천 만	1-2 천만	2-3 천만	3-5 천만	5천 이상	평균	30만	30- 50만	50- 100 만	100 만 이상	
미만													
	30인 이상	5	12,546	20.0	20.0	0.0	0.0	60.0	268	20.0	0.0	20.0	60.0
	2010년 전	74	3,090	20.3	28.4	20.3	10.8	20.3	73	10.8	24.3	41.9	23.0
인 증 시 기	2010년-2015 년	11 8	2,959	32.2	18.6	17.8	8.5	22.9	80	15.3	24.6	39.8	20.3
	2016년-2020 년	12 3	2,751	23.6	19.5	17.9	23.6	15.4	82	14.6	20.3	39.0	26.0
	2020년 후	84	3,230	15.5	25.0	20.2	17.9	21.4	120	3.6	11.9	33.3	51.2
사 업 자	개인	17 4	2,522	24.7	25.9	18.4	17.2	13.8	79	12.6	22.4	36.8	28.2
	법인	22 5	3,327	23.1	19.1	19.1	14.2	24.4	94	11.1	19.1	40.0	29.8
업 종	생산·가공	65	2,954	15.4	29.2	15.4	21.5	18.5	96	13.8	20.0	30.8	35.4
	집수리	84	2,330	32.1	25.0	14.3	10.7	17.9	63	10.7	28.6	45.2	15.5
	세탁·청소	84	2,323	27.4	26.2	20.2	10.7	15.5	55	16.7	21.4	57.1	4.8
	배송·운전	57	1,751	38.6	17.5	21.1	14.0	8.8	91	14.0	28.1	24.6	33.3
	음식점	46	4,174	4.3	17.4	23.9	30.4	23.9	126	2.2	13.0	23.9	60.9
	유통·판매	35	4,683	8.6	14.3	28.6	17.1	31.4	141	2.9	8.6	31.4	57.1
	사회서비스	16	6,833	25.0	18.8	12.5	0.0	43.8	135	12.5	6.3	37.5	43.8
	재활용·환경	7	4,007	14.3	0.0	14.3	28.6	42.9	72	14.3	0.0	71.4	14.3
	기타	5	2,280	60.0	0.0	0.0	0.0	40.0	47	40.0	20.0	20.0	20.0
소 재 지	서울	66	3,911	10.6	25.8	24.2	16.7	22.7	110	6.1	10.6	43.9	39.4
	부산	37	3,116	16.2	24.3	10.8	27.0	21.6	100	8.1	13.5	32.4	45.9
	대구	23	2,649	17.4	17.4	26.1	8.7	30.4	81	13.0	13.0	39.1	34.8
	인천	23	3,617	34.8	17.4	4.3	13.0	30.4	83	17.4	17.4	47.8	17.4
	광주	14	2,293	21.4	28.6	14.3	7.1	28.6	70	7.1	35.7	42.9	14.3
	대전	10	3,650	10.0	30.0	10.0	20.0	30.0	99	10.0	20.0	40.0	30.0
	울산	10	2,450	10.0	10.0	30.0	40.0	10.0	124	0.0	0.0	50.0	50.0
	경기	67	3,201	17.9	16.4	23.9	19.4	22.4	113	9.0	11.9	35.8	43.3
	강원	19	1,753	31.6	42.1	10.5	0.0	15.8	63	0.0	47.4	36.8	15.8
	충북	11	1,891	18.2	27.3	27.3	18.2	9.1	50	18.2	36.4	36.4	9.1
	충남(세종)	21	2,810	23.8	28.6	19.0	14.3	14.3	78	4.8	23.8	57.1	14.3
	전북	30	3,707	40.0	13.3	20.0	6.7	20.0	51	26.7	30.0	36.7	6.7
	전남	14	1,005	57.1	21.4	7.1	14.3	0.0	56	14.3	28.6	42.9	14.3
	경북	18	1,061	66.7	11.1	11.1	5.6	5.6	54	22.2	44.4	16.7	16.7
경남	32	2,648	21.9	25.0	25.0	15.6	12.5	65	25.0	28.1	31.3	15.6	
제주	4	5,013	25.0	25.0	0.0	25.0	25.0	180	0.0	0.0	25.0	75.0	

IV. 결론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자활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활기업을 검토한 결과 자활기업은 10인 미만의 작은 규모(93.4%)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초기 인증받은 자활기업이 20.8% 되며, 약 30%의 기업이 2016년~2020년 사이에 인증받은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56.7%)가 절반이상이며, 집수리(21.6%), 세탁·청소(19.4%), 배송·운전(15.0%) 등 자활사업단의 업종을 이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성숙단계(35.1%)이기도 하지만 신생단계(8.8%)이거나 위기단계(14.1%)이기도하다.

자활기업은 일하는 사람, 판로, 운영자금, 자원연계, 공간이 있어야 반드시 운영될 수 있다.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자활기업에서 일하며 가장 변화한 점이 자아존중감이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7.6점). 이렇게 일하며 월 206.8만원(세후)을 벌고 있으며, 종합검진이나 복지포인트, 직원 포상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은 향후 1년 후에도 계속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할 것이지만, 몇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자활기업의 사업장이 임차형태(91.8%)였으며, 그 중 약 70%가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평균 월 88만원의 월세는 5인 미만의 영세 자활기업에게 큰 부담감으로 느껴진다. 또한 홍보가 가능한 구성원이 없어서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49.2%) 소비자(B2C)에게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높음(43.9%)에도 홍보와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활기업에게 지원한 다양한 제도 중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이용경험(67.0%)이 많고, 도움정도(만족도 4.6점/5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울 때 정부정책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28.0%) 운영자금(83.4%)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 중에 행정 서류를 제출(16.3%)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12.7%)도 어렵게 느껴졌다.

따라서 자활 기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인력확보의 어려움(76.9점/100점), 자금조달(73.6점/100점), 경영방법(66.8점/100점)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 기업규모별, 성숙도별 필요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정교한 지원제도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자활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전문인력)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 초기 자활기업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서도 전문인력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되었다. 홍보, 회계, 노무 등 전문인력과 사업종류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동종 업종에서 받는 인건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차등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업종에 따라 하드웨어(사업개발비, 시설비,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장단계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이 필요한데, 신규 자활사업단에서 성장한 자활기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큰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지역공산품, 농산물 등을 가공하는 업종의 경우 개발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아이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활기업의 경우 청소, 세탁, 배송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 되면 경쟁력이 없어진다.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여 편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운영자금은 사회적기금 등에서 저리로 대출 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활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판로 및 홍보방안, 교육)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넣고,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비율을 실적 반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판매 뿐아니라 기업 대상 서비스 및 판매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별 홍보 방법, 품질관리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자활기업을 운영하는데 근간이되는 기관의 미션을 공유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업종별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충청지역 내 다양한 조직의 협력으로 연계정도를 강화하여 자활기업의 상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주제발표 1 -

(이현수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장)

자활기업 창업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체계

자활기업 창업이전 단계에서의 지원체계

아산지역자활센터장 이현수

■ 자활기업은?

-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 설립절차에 따름

■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함
-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직접 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 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출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 자활기업의 현황

2023년 전국의 자활기업은 총 954개(광역자활기업 43개, 전국자활기업 4개 포함) 이다. 자활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총 8,029명(광역자활기업 589명, 전국자활기업 17명 포함) 이다.²⁾ 이를 단순계산하면 1개 기업당 8.41명이 종사하고 있다.

우리는 돌봄업종, 세탁업종 및 청소업종 등의 경우 종사자가 다른 업종의 자활기업보다 많다고 익히 알고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67.3%를 차지한다. 또, 2010년 이전에 자활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은 평균 종사자수가 22명, 2010년~2015년에 인정된 기업은 종사자 수가 13.5명, 2016년~2020년에 인정된 기업은 종사자 수가 7.3명, 2020년 이후 인정된 기업은 종사자 수가 4.4명으로 나타난다.

■ 자활사업의 현황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은 총 3,246개로 업종을 살펴 보면 음식점(16.4%), 청소(10.8%), 위탁생산(9.6%)의 순으로 나타난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주민은 총 50,907명으로 업종별 참여주민의 수를 보면 위탁생산(6,739명), 청소(4,905명), 음식점(4,253명)의 순으로 전체 참여주민의 31% 가량이 3개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주민의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29.7%, 50대 이상 35.8%로 50세 이상의 참여주민이 전체의 65.5%를 차지한다.³⁾

■ 환경은 변화였는가?

지난 2012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전문위원회와 중앙자활센터(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는 자활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의 문건을 다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344개의 자활기업, 8,856명의 종사자가 자활기업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전체 자활기업 중 59%가 5대 표준화사업(청소 21.9%, 집수리 15.3%, 간병 15.1%, 폐자원재활용 6.4%)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장애통합, 산모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0% 이상을 차지하였다.⁴⁾ 당시에 자활기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내적 성장동력의 취약

- 기술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업종이 다수를 이루며
- 소규모 창업과 영세한 운영형태로 인해 불안정한 경영구조가 존재하고
-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구성하기 어려움

2. 지원부족

- 대다수의 자활기업이 규모의 영세함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 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 자활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며 자활기금의 마련에 집중되어 있어 자활기금의 활용도 한계가 있음

3. 판로

-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부족
- 이로 인한 판로개척에 난항

3) 2023 자활사업 통계연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기업 지원방안 및 중앙자활센터(현 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 자활기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고 확장성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 소규모 창업을 지양하자

- 앞서 드러났듯 2020년 이후 인정받은 자활기업은 종사자 수가 4.4명이다. 반면 2010년 이전 인정받은 자활기업은 종사자 수가 22명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자활기업이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단순히 규모만 갖췄다고 지속할 수 있는가? 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

- 자활기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을 통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다양하다. 기능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객을 대면하는 사업장이면 CS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주민들 스스로 조직의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일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한다면 어떨까? 사업단의 시작부터 단단한 하드웨어를 장착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우리는 통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10년 이상 지속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활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재정과 연계되는 사업을 고민하자

- 오랜 기간 지속하고 성장한 자활기업 중 다수의 기업은 정부재정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주거복지사업, 양곡배송사업, 청소사업 그리고 돌봄사업이 그러하다. 다만, 정부재정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공익적 성격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연계 사업을 만들어 왔다. 언제부터가 고민하지 않고 요구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지역의 욕구를 그리고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고민하고 이를 자활근로사업으로 풀어낸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존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정부재정 연계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자산키움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자

- 지난 2009년 감사원은 자활기금이 당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활기금을 지원하고 사용 용도를 완화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0년 당시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3.5%에 달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전체 적립액의 3.2%에 불과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금 활용 결과를 지자체 평가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환경이 바뀌었다. 지역의 자활기금은 이전에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왔으나 지금은 아예 쌓이지 않는 구조이다. 우리는 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중 30%가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보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활기금이 쌓여만 가고 사용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과 같이 중앙자산키움펀드가 운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장이 고민하고 지원조직인 광역자활센터가 세팅하여 사업단부터 규모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자산키움펀드를 적극 운용한다면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그리고 그 자활기업이 지속성을 갖는데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이다.

- 실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자활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업단 매출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해당 사업단이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야 해당 사업단을 수단으로 경제적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주민분들이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활사업 안내에서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설립·육성 및 각종 지원에 대한 관리를 인정 취소까지 해야 한다⁵⁾고 명시되어 있다.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 이미 독립된 구조를 갖춘 조직이다. 사업단에서처럼 담당 실무자가 모든 행정업무 회계업무를 그리고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 월 매출이 많다고 해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전 해당 사업단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논의하고 실무자의 역할을 점차 줄여가면서 회의에서부터 운영업무까지 주민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체계를 점검하자.

-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기 전 주민분들은 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컨설팅을 받게 된다.

- 과연 실효적인가? 교육과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후 현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교육과 컨설팅을 사업단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받고 창업 전 까지의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문서를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전 과정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5) 2024년 자활사업 안내

- 주제발표 2 -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자활기업 창업이후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지속가능한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으로서의
자활기업 창업 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방안

새로운 사회, 대안이 되는 자활기업으로!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충북지부 부지부장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송유정

자활사업은 IMF 이후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출발합니다. 일상을 살던 서민들이 갑자기 정리하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도탄에 빠지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가장은 노숙자가 되던 시절입니다. 절망에 빠진 민생을 구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생산적 복지'이념은 자활근로사업의 근간이 되는 철학으로 자리잡았고, 당시 5대 표준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자활기업으로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활기업은 우리사회에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저소득주민들의 자활·자립의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만형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2천년대 초기 5대 표준화사업을 토대로 성장하여 집수리사업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으로 진화하였고, 저소득주민들에게 한 달에 한번 정부양곡을 배달해주는 사회취약계층의 든든한 이웃은 양곡택배사업, “희망나르미”가 된지 오래입니다. 각종 행사, 마을별 도시락배달과 청소, 위생, 방역사업도 자활사업에서 전문성을 향상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자활이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연대와 협력'이었습니다. 무한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만이 우리들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은, 자활기업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어쩌면 '지속가능성'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성과를 만들었기에, 전국에서 분투하는 우리 자활기업의 질긴 생명력은 가히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자활기업의 성장에는 우리 사회 공동의 노력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여느 조직, 기업도 왜 안그렇겠습까만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기업은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인 까닭입니다. 일 예로 각 지역의 집수리사업단으로 출발한 주거복지영역의 자활기업은 지자체의 연계를 통해, 현물 주거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주거 상담과 정보제공을 해주는 「주거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자임하였고, 이제 전국적인 흐름으로, 이 서비스를 상담하는 주요한 창구인 공공기관, '주거복지센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제 집수리 이상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로 성장'해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또 어떠합니까? 자활기업으로 태동으로 간병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2008년 제도화 이후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자활기업이 이제는 500명~1천명이 주인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규모화하여 지역의 '공공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요양원, 주간보호소를 건립하는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헌신에 당사자의 한사람으로 무한 자부심을 느끼며 거듭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필요(need)를 비즈니스화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었습니

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안에서 그 거대한 전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활기업을 우리는 어떻게 성장지원하고 대안사회로의 한발을 내디딜 것인가? “사단법인 한국자활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자활기업 업계는 지난 수년동안 성장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창업-성장-성숙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5대 표준화사업 이후, 자활진영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척박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다소 더 떨어지는 자활근로참여자의 역량은 신규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으려니와, 그 안에서 꾸준히 교육, 인큐베이팅, 마케팅과 판로확보로의 공정을 거쳐오는 노력에도, 양태들은 다양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활센터는 '제도적 동형화'가 된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기별 평가에서 요구하는 기본 여건에 충실할 뿐 획기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활동가의 무리한 헌신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구슬땀으로 수레바퀴를 돌리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은 전년 대비 96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자활기업으로의 인입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자활사업을 통해 창업한 비율은 취업자 대비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를 접하면 자활기업 현장의 시선에서는 더욱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⁶⁾

초기 자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있어, 어떠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모기관인 자활센터의 지원이 과연 합리적인가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 제기일 것이며, 최근 우리지역인 제천시에서 있었던 자활근로사업 사업수익의 실무자 횡령 사건 등은 우리 힘을 빼기에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무척 큰 파장이 있는 사건일 뿐 아니라, 성실한 자활기업으로의 진입을 막는 구조적인 민낯이 드러난 사건임에도 지역에서는 쉬쉬하기 바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누워서 침뱉기'라는 것인지, 사건을 은폐하는데만 급급한 비겁함은 건강한 자활기업의 생육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소규모 자활기업의 경우 여전히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모법인인 자활센터의 의존적 운영 행태는 자립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연대와 협력이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5인 이상의 자활기업에 대해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지침이 보다 현실화되어 더 영세한 자활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지원제도가 현실화하는 되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물론 전제는 협회 활동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자활기업의 연대체인 한국자활기업협회에서는 공유행정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투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영역의 협력사업이 종료되면서 해당 조직을 유지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활센터에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과제를 형식적으로 배당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해당 공유행정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지원 조직을 권역별로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골간 체계안에 협회 내 지부조직이 자생할 수 있는 운영구조를 확보, 전문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책에서는 현재 광역자활센터가 이 기능을 담당

6) 2023자활사업 통계연보 12p 참조

한다고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광역자활센터는 각종 공모사업 등 지원사업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규제, 감시, 평가 등 행정영역의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성장단계의 지속적인 맞춤형 인큐베이팅이 가능할 것이고, 이 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가 자생하게 되면서 시장도, 인력도, 협력자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012개가 운영되는 2022년의 수치는 '2012년과 비교해볼 때, 25% 감소한 수치라는 것. 본 데이터는 신규자활기업의 창업 뿐 아니라 규모화, 전문화를 담보하는 '지속가능성'이야말로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⁷⁾ 소규모 자활기업의 성장은 몇몇 수공업적인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궤도를 넘어가는 지원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성장단계의 자활기업의 현실은 어떠할까? 일정한 규모의 성장에 이르렀다하더라도 자활기업은 여전히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판로 확보의 어려움, 일반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비해 인지도 부족과 모호한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우며, 이는 외부적 환경 외에도 당사자, 운영주체들의 경영 마인드와 경영능력 부족 등의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은 어쩌면 숙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휴먼케어'의 대표로 나는 단연 '모호한 정체성'을 먼저 듭니다. 법인격을 명백하게 비영리법인격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지역의 사회복지현장, 특히나 지자체에서 영리 성격으로 해석하는 편향이 가장 힘든 과제입니다. 일종의 이중잣대인 셈일까요?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은 여전히 목마르답니다.

특히나, 기존의 사회복지페러다임이 저출생 고령화사회를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무겁다는 점을 착안해 볼 때, 통합돌봄으로의 대전환에서 기존의 복지영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판을 짜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를 보다 선재적으로 고려하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임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어느사회에서나 쉽지 않습니다. 비단 사회서비스 영역, 복지영역만의 기대와 바램만은 아닐것입니다. 자활기업은 지역의 '필요'에 기반해서 '사회안전망'으로 다양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재편하여야 합니다. 일반시장과의 경쟁을 통한 도시락 판매보다는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식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돈은 되지 않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여하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지자체는 이의 부족분을 단가로서 채워주고, 가점부여 등 현실적 지원체계를 상설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장단계에 있는 자활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은, 개별 자활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이 아니라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의 마중물이라는 인식을 넓히는 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위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면 차츰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일선 성장단계의 자활기업들이 가지는 문제는 자금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활진영은 지난 수십년동안 자활기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적 토대를 조성하였다고는 하나, 기금의 운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 차상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성은 필요하나 기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여전히 문턱은 높으며, 규모별 지원으로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의 시대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자활기금활용방안에는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사업도 있는데, 작금의 고금리 사회에서 성장단계의 자활기업이 자활기금 외 일반금융회사의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고금리의 여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책이 통용되는 지자체를 찾아보기란 어렵다는 것이 근거일 것입니다. 사업장 점포 지원 대출

7)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4p 참조

상품의 규모도 이제는 상한선을 높힐 때가 되었습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자산형성지원을 보다 획기적으로 펼쳐갈 때, 비로소 자활기금의 활용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넓어지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이미 '사회형 자활기업'라는 용어로 현재 고용형 자활영역의 특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포괄적 지원정책'을 늘어놓는 것을 넘어,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이야말로, 규모화하여 저출생 고령화를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명을 띤 자활기업들에게 마땅한 미래 비전이 아닐까? 대안이 되는 자활기업의 성장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의 견인차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 1 -

(김기흥 한국자활기업협회 정책위원장)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편

김기홍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정책위원장

1. 자활기업 성장의 걸림돌과 원인

1) 창업자가 줄어드는 자활사업 구조의 문제

- 코로나19,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자활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0년~2021년 자활기업 감소수가 급증했고, 신규창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신규창업수 감소와 더불어 창업인원도 감소하는 추세.
- 창업수 감소의 원인으로 2019년부터 자활근로사업단 성과급 증가(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 최대 월 70만원) 및 근로능력 미약자로 증가로 자활기업 창업 희망자 감소.
- 2022년부터 지역자활센터의 시장형사업단 비율 30% 유지, 사업단 유지기간 5년 제한 등 규제가 없어지고, 사업단 매출의 70%를 사업비, 성과급 활용 가능해져서 사업단 참여주민에 대한 창업 유인 효과도 급감소하게 되면서 시장형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수가 줄어들고, 창업 하더라도 인원수가 감소.

2) 창업자의 사업운영 역량이 부족하거나 센터에 의존하는 문제

- 소규모 기업은 구성원 전체가 서비스·생산현장 중심으로 일하게 되면서, 대표자가 현장일 관리하기 바쁘고 경영관리는 물론 기본적인 사무행정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자활기업 지원사업은 늘고 있으나 대외활동 부족한 사업에 도움되는 정보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정보를 알아도 사업 신청을 위한 기획, 사무행정 업무에 역량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소규모 기업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기업을 성장시킬 기회가 다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 창업자(대표자)의 사업운영역량은 소규모로 창업한 자활기업이 향후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사업단의 창업전 단계에서 사업운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는 부족한 상황임.
- 창업자의 사업운영역량이 부족한 경우 창업 후에도 사업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하게 되고, 결국 자립적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창업자금, 한시적 인건비 지원 종료와 더불어 폐업하는 경우 발생

[표 1] 창업실무과정 운영자립도 진단결과⁸⁾

구분	평균	경영기획	인사관리	품질관리	조직관리	영업관리	재무관리	대외협력
점수	2.48	2.48	2.37	3.55	2.88	2.78	1.70	1.79
백분율	49.6%	49.6%	47.4%	71.0%	57.6%	55.6%	34.0%	35.8%

8) 한국자활연수원 자활기업창업실무과정 결과보고 (2020. 12)

3)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일정기간 뒷받침하는 보호된 시장의 감소

- 주거복지, 돌봄, 양곡배송, 청소소독, 도시락사업 등은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업종으로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창업 초기에 실력이 부족할 때 공공영역의 보호된 시장이 자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음.
- 자활기업은 창업후 3년까지가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임. 창업자금, 한시적인건비 등 재정지원제도는 2년 이후 급감하여 창업 2~3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됨. 소규모기업이 자리잡고 성장하는데 지원제도와 더불어 일정기간 보호된 시장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공공시장 확보가 어려워 지고 있음.
- 최근 외식업, 유통업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연계하여 자활기업 창업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단 단계부터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창업이후 유지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2. 소규모 자활기업의 성장전략

1)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창업하면 더 유리해지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서 성장가능성 높은 자활기업 창업시 자활기업, 구성원 및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지원확대계획 (창업자금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 지역에서는 사업단이 창업단계에서 규모를 확대하여 창업하는 경우 또는 창업한 소규모 자활기업이 법인전환, 사업개발, 인력확충 등 사업 확대를 모색할 경우 자활기금 활용하여 추가적인 사업개발비 지원 또는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또한 자활기업과 인턴형 자활사업을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인턴이 자활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단 참여인력의 자활기업 일경험 기회 지속적, 정기적으로 제공 등 여건 마련

2) 소규모 자활기업의 사업운영 활성화 위한 사무행정 지원사업 활성화

- 소규모 자활기업의 사업운영 및 사무행정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자활공유행정사업 활용 활성화
-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자활기업 30여 개소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가입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진 예정

3) 예비창업자, 신규창업자의 사업운영 역량 강화 지원

- 창업경영아카데미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신규창업 기업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기획, 인사노무, 조직운영, 생산관리, 영업마케팅, 재무, 대외협력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자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대표자와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함.

4) 소규모 자활기업간 연합 또는 합병을 통한 규모화 지원

- 동종 또는 이종의 소규모 자활기업 2개 이상이 연합하여 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용을 줄이며, 경영 및 사무행정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 (발제자의 ‘지역기반 컨소시엄사업’ 과 같은 방식임.)
- 유사사례로서 자활기업 일과나눔사회적협동조합 (돌봄서비스, 주거복지, 청소소독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초지자체 내에서 인지도 및 경쟁력 향상), 자활기업 협동조합위드(주거복지, 컴퓨터수리, 재활용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광역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기업간 연합과정을 컨설팅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

5) 소규모 자활기업이 일정기간 성장할 수 있는 공공영역 보호된 시장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정기간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자활기업이 조기에 뿌리내리고 운영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3. 조사결과와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1) 인력확보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 우선 인력확보 어려움과 관련하여 자활기업이 안고 있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는 인정요건 변경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확보의 어려움이며, 두 번째가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문제임.
- 첫 번째 수급자, 차상위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자활기업이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차상위자(탈수급, 탈차상위 포함) 최소 2인 이상을 구성원 및 운영주체로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 인력이 퇴사할 경우 신규로 수급자, 차상위자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이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임. 자활기업에 인턴 또는 취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 추진중이나 효과 부족함. 근본적 방안으로 인정요건에서는 수급자, 차상위자 2인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요건에 이를 포함하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기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두 번째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큰 호응과 효과를 얻었고, 특히 자활기업은 창업자의 사업경험과 역량이 사회적기업에 비해 약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활기업에게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2022년부터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구성원수 5인 이상이고 법인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소규모기업의 경우 지원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4인 미만의 자활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 있음. 자활기업은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사업이 없으므로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따라서 소규모 기업 및 신규창업 기업들의 경우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무영역(인사노무, 세무회계, 사무행정등)에 대한 어려움을 ‘자활공유행정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 구성이 필요함. 신규창업시 창업자금을 통해 공유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2년 후 사업 운영 안정화를 통해 자부담 능력을 높이며, 이후 사업 성장으로 인원 확대시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인력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 자활기업이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종 및 이종 기업간 협업으로 규모화를 이루는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기업당 2인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자금조달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운영자금 및 인건비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이 가장 필요하나, 정부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등)은 제출서류준비, 높은이자, 기업가치입증 어려움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반면, 규모 있는 기업의 경우 높은 임대료, 임대공간에 시설설치 부담 등으로 시설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나 정부정책자금은 융자한도가 낮거나, 해당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
- 소규모 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자활기업 자조금융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자활기업들이 자체 출연한 자금을 보건복지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활기금 자조금융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활기업 소액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 한국자활기업협회 경기지부의 경우 2022년부터 회원 기업들이 2억원을 출연하고, 경기도가 1:1 매칭으로 2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4억원의 자활기금 자조금융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총 3차에 걸쳐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의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상환기간은 2년, 이율은 2~3%, 융자한도는 기업당 출연금의 최대 5배까지 무담보 무보증 방식으로 융자하고 있음. 자활기업협회에서는 경기지부의 사례를 확산하여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자조금융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의 1:1 또는 1:3 매칭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
- 규모 있는 기업의 자산화지원 융자사업은 토지 또는 건물 매입이나 건축, 큰 규모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융자금의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상환기간도 길어 질 것임. 따라서 해당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자활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사업 연계시에는 정책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이자율과 자활기금의 대여이자율(1%)간 금리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3) 사회적가치 실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 자활기업은 생산협동공동체운동의 역사성을 이어 받아 태생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임. 수급자, 차상위자를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며 자활의 삶을 이루어 내는 기업이며,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기업이기 때문임. 조사결과에서 자활기업

운영에 중요한 사회적가치로서 취약계층 안정적·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확대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달리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설립행위 자체가 사회적가치 실천이지만 이를 구체적인 지표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사례가 별로 없음. 자활기업들도 많이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측정지표(SV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자활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측정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이에 자활기업연구소가 2021년부터 자활기업을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를 개발하였고, 올해말까지 현장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는 자활기업 설립부터 운영전반에 걸쳐 사회적가치 실천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활기업 윤리경영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우선구매의 심사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표 2]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및 성과 측정지표

가치	범주	영역	구분	지표	배점
자활 (35)	기업 목적	저소득층 일자리와 공공성	사회적 가치	1. 수급자·차상위자·취약계층 구성	10
				2. 기업의 공공성 실현	5
			사회적 성과	3. 탈수급자·탈차상위자 비율	10
				4. 일자리 성장과 취약계층 고용율	10
자립 (35)	사업 경영	경영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5. 독립적 경영 관리	10
				6.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 수립	10
			사회적 성과	7. 구성원 근속연수 수준	10
				8. 구성원과 이익 공유 수준	5
협동 (20)	조직 운영	자발적 참여와 역량개발	사회적 가치	9. 주체적 참여와 의사결정	10
				10. 구성원의 역량개발	5
			사회적 성과	11. 구성원 성장 수준	5
연대 (10)	사회 관계	지역사회 협력과 공헌	사회적 가치	12. 지역사회와 협력	5
			사회적 성과	13. 사회공헌 수준	5

4)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 효과성과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 기업규모가 클수록, 운영기간이 길수록, 법인일수록, 정부계약 비중이 높을 수록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개인사업자일수록, 매장, B2C업종일수록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주로 음식점, 유통판매점, 인원이 적은 생산가공업이나 세탁청소업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네트워크 및 협의체를 통해 정보, 자원, 아이디어, 기술/노하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는 사업적 성취를 높이는 계기되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함. 그러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조직이 내부적으로는 자활기업협회와 지부, 전국자활기업(배송, 돌봄, 주거, 청소)과 광역자활기업, 업종 네

트위크 등이며, 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임.

- 음식점, 유통판매점, 인원이 적은 생산가공업이나 세탁청소업 등은 소수인력이 주로 서비스(생산)업무에 집중되어 외부의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정보, 자원, 아이디어, 기술/노하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사업적 성취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므로 기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협의체, 자활기업협의체, 광역자활센터간 네트워크(협의체) 활동을 통해 관계망에서 떨어져 있는 소규모 자활기업들을 파악하고, 자활기업협회 등 기업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4. 마무리하며

- 1) 최근 자활기업의 전체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자활기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위기상황에서 자활기업 실태조사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하며 매년 실시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더욱 의미 있을 것임. 조사결과와 분석내용에도 적극 공감함. 특히 생존단계의 자활기업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2)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과 2차,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으로 이어지면서 자활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와 지원체계가 향상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규모화&협업 지원 같은 구체적인 재정지원이 동반된 자활기업 지원사업이 전국단위로 추진된 것은 불과 2년전(2022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자활기업 지원체계가 든든하지 못했음.
- 3)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개발원, 센터협회, 기업협회, 광역자활센터가 함께 논의하여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을 위한 연간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제안함.

- 토론 2 -

(황정구 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의 육성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차원에서의 지원 및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의 육성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차원에서의 지원 및 개선방안

토론자 : 황정구(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영역의 근간으로 여러 체계적인 제도기반을 만들어왔다. 2002년 국민의 정부는 근로능력과 여건상 정규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어려운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민간인이 담당하기 어려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인 일자리인 무료간병인사업, 음식물재활용 사업, 집수리 도우미사업, 청소사업, 폐자원재활용 사업을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지정하였고 자활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가 개정되며 [자활기업의 적립]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자활기업이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영역으로 포함되면서 위협도 되지만 변화되는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원, 제도적 방안이 확대되며 많은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영역의 선도적인 역할과 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국 1800여개소가 넘었던 자활기업은 현재 938개소가 있으며 그 수도 감소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부터 자활사업의 참여하는 참여주민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활근로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근로역량이 부족한 참여주민이 유입되면서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2017년 「자활사업의 안내」 지침 변경으로 자활기업 안정적인 창업과 저소득층의 창업도모를 위해 이루어졌던 자활센터 실무종사자의 자활기업 대표로 합류하여 창업되었던 절차가 중지되어 창업의 안정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자활기업의 변화추이는 자활기업 지원의 과제로 다가왔다.

연구결과 토대로 제도화된 5대 표준화사업, 실무자 인력지원 및 IMF이후의 자활 참여주민의 창업 된 2015년까지의 자활기업 305개소 48.8%와 2016년 이후 창업된 319개소 51.1%에는 사업업종의 성격과 기업의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원체계도 성장단계별로 정교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광역자활센터의 출범이후 창업한 자활기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활기업 내의 성장단계별, 업종체계 또는 규모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첫째, 자활기업 지원체계에서의 성장주기 별 인큐베이팅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자활기업 초기 단계에서는 회계, 세무절차 및 회의체가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절차들이 매출과의 연관성 및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자활기업이 초기부터도 세금신고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대행 체계구축하고 이해를 높이는 교육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참여주민에 한해서가 아닌 참여주민 창업을 독려했고 지도하는 실무자의 경우도 경영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활기업 창업전 실무자 지원체계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중앙자산활성화자금사업 이관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관에 따른 자활기업 지원체계의 변화 없이 사업과 절차만 이관되어 성장단계별 편차없는 정교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을 받아야하는 소규모 자활기업은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되어 있는 자활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비율 유지와 사회적 책임 실현, 일자리 확대 그리고 이윤의 증가라는 자활기업의 과제이자 숙명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이후 공공형 자활기업이 줄고 서비스형 소규모 인원의 창업이 많은 자활기업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활기업 인력의 인건비 지원이 현재 5인 이상의 종사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업종에 따라 3인 이상으로 하향 조절 등을 통해 한시적 지원을 통한 소규모 자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여야한다.

또한 자활기업으로 창업 후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자활기업에 대한 위기개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신청주의 공모사업으로 인해 신청 시 대응하는 체계가 아닌 광역차원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기개입 지원 솔루션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당사자만의 운영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업개발비의 사업의 성격은 변화가 필요하다.

인력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위기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 솔루션과 사업전환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의 자산지원 자부담율을 줄여 자활기업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활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영역의 주요시장은 우선은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의무구매’ 절차에 따른 우선구매 및 혜택을 지원받아야 하나 사회적기업에는 준용되고 있는 유통업 등이 자활기업에는 직접 제조 생산한 제품으로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자활기업이 자활사업단의 제품 또는 자활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창출 할 수 있는 유통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혜택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인프라 네트워크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 한국자활기업협회가 공익법인 지정으로 전국의 지부가 설치되며 또 하나의 자활기업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계화에 반면 소규모 민간영역 자활기업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태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 자활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공유와 연대가 필요하지만 그런 네트워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타 영역에서 보면 전체영역에서 국립, 법인, 민간영역이 있듯 자활기업에도 세부적 영역에 대한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이런 조직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보다 정교한 지원체계가 수립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토론 3 -

(신동호 대전대덕지역자활센터장)

지역자활사업단 너머 자활기업으로

지역자활사업단 너머 자활기업으로

신동호 센터장 대전대덕구지역자활센터

[들어가는 말]

자활기업의 모태는 지역자활센터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곳은 지역자활센터가 유일하다. 취약계층의 탈수급과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의 매출액이 총 사업비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진입형 사업단 유형에 두고 관리를 한다.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립 욕구가 있는 참여자들로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참여주민간 갈등과 수급권 상실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진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또한 경제 성장률 둔화로 소비 약화와 가정의 재정 지출감소 등은 사업단 매출 감소와 자활기업 폐업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어려움은 사업 아이템 발굴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지역자활협회에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말]

첫째, 지역자활센터 사업 아이템 개발에 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지역자활협회가 지원이 필요하다. 에코위싱사업, 편의점, 음식점, 양곡배송 사업등은 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협회등이 런칭한 사업으로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 있는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자활기업으로 진출한 사업이다.

둘째,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경영지원, 품질개선, 홍보, 마케팅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공동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창업 전까지는 지역자활센터가, 창업 후는 광역자활센터가 지원·관리하고 있다. 이 시점을 창업 전부터 1-2년 동안 함께 창업 전부터 재정지원이나 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공공건물에 위치한 사업단 입점을 통한 안정적 소득을 기대해 본다. 지금의 상황은 사업단 예산으로 권리금이 있는 사업장 임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 인구비율이 낮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으로는 매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기업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안정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안정적 매출이 가능한 매장확보가 자활기업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자활센터의 생산품이나 자활기업의 생산품을 지자체가 적극적인 구매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생산품은 품질과 맛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

하기에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구입후 타 기관, 타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선물용으로 사용될 경우 자립을 도울수 있다.

[마무리 말]

자활기업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자활기업 창업 지속성과 기존 자활기업 성장이 있기를 바란다.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사업단 발굴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자활센터는 새로운 사업단 활성화를 통해 자활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광역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를 통해서도 정부나 기업과 연계한 사업만이 안정적 매출 성장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성장, 유지되고 있다.

현실 상황을 외면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어렵다. 이런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 토론 4 -

(서광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언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광국 본부장

‘자활사업의 꽃은 자활기업이다’라는 말이 현장에서 회자되고는 한다. 2015년 자활기업 백서를 시작으로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정책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지원 영역이 구체화되면서 자활 현장에 자활기업 활성화대책이 발표되고, 중앙자활자금이라는 일정한 현장 지원 재원도 마련되는 등 2019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금융 및 비금융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건위기인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와 인내를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자활기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의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자활기업이 본격적인 정책 대상으로 등장하기 전후를 비교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할 것이다. 초기 성장하는 자활기업이 종사자의 주도적인 견인과 헌신, 참여자의 도전으로 일정한 공공섹터에서의 위탁사업들이 경쟁력을 가진 채 시장으로 진출했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정책화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점차 기업으로서의 지원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해나가는 상황이다. 다만 앞으로 자활기업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성장주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자활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WHY)와 무엇을(WHAT)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HOW)와 시점(WHEN)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중심단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현장의 실태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수요에 대한 파악이고 이를 기반하여 지원조직의 고민과 자활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이 서로 일치하는 시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자활기업의 새로운 환경과 변화의 기로

자활기업의 상황을 볼 때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전제해야 한다. 그 배경에는 첫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의 현실화, 자립성과금이나 내일키움수익금 등 인센티브 영역의 확대 속도와 자활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 안착화에 대한 시기적 불일치이다. 이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의 선제적 참여 경로에서 이제는 대등한 참여구조로 바뀌고 심지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활기업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급여 등)을 가진 경우도 발생하는 등 기존의 자활 경로의 진행이 이제는 사라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활기업은 어려운 현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기초역량이 떨어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부터의 인력 유입의 확대보다는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자활기업 지속가능성의 문제의 핵심은 자활근로사업단과의 인력 연계와 협업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진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과거와 다른 자원 확보의 구조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이 확대되었던 이전 정부에서는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그리고 직접재원투입을 위한 중앙자활자금의 투입, 그리고 사회적기금 등 새로운 재원 투입 주체가 확대되었다. 그로 인한 자원 확보의 다양화 등 자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이라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의 확대라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자금조달에 대한 변화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50% 이상이 더 이상 자금을 대출받거나 조달하지 않는 등 규모화나 확대를 위한 금융적 기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초기 인증기업과 성숙 또는 위기 단계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만 이용하고 있다는 양극화의 모습도 보인다.

세 번째로는 자활기업의 창업이 과거와 같은 평가방식의 밀어내기가 아니라, 보다 준비된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체 매장을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다. 이는 자활기업을 준비하는 참여자에 초점을 둔 지원이며, 기업가적인 사고와 초기 어려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로 연계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영세성은 여전히 초기의 한계이며 자활근로사업단의 경험으로 규모화나 효율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기업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하는 요구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지자체나 공공위탁사업 하나로 연계되어 창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주체들과 민간기업과의 협업단계요구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판로개척, 홍보지원, 자금지원 등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사회서비스영역의 기존 자활기업들과 집수리, 배송 업종의 기업들은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판매매장을 가진 신규 인정 자활기업들은 민간기업들과의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단계에서 생존단계, 그리고 성장단계, 성숙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차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분화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지원조직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8년 자활기업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원조직인 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을 위해 사업개발비지원, 인프라 및 공간지원, 시설개선 등 기능보강지원, 경영컨설팅을 기반으로 하는 판로지원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필요 지원기관과의 일치보다는 현장 욕구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이전에는 부족한 재원으로 단순히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자활기업의 지원을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1년에 450억이 넘는 중앙자활자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파편적 지원의 형태들로 해당 자활기업의 경영 상황에 급급하게 대처하는 상황이다. 이는 자활기업의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대상에게 맞는 ‘핀셋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에는 아직 개발원도 광역자활센터도 지원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중앙자활자금을 통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명암

그동안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수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선정·지원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자활기업의 새로운 지원 자원의 하나로서 중앙자활자금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앙자활자금의 법적 안정성은 차제에 두고라도 현장의 자활사업에서 자활기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규모화, 그리고 시설 개선 등의 인프라 지원, 창업에 따른 근로유지 지원금, 기능보강에 가까운 사업개발비지원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 항목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2024년부터는 후속지원이나 추가지원 등 지원의 지속가능성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보다 면밀한 지원을 위한 16개 광역자활센터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원의 폭과 범위도 확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내용에서도 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모두에게 처한 지원의 효과성 확보라는 현실은 놓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초기 개발원의 직접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공모방식은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서류가 준비된 자활기업이나 이미 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측면이 강하고,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활기업에게는 지원의 열악함이 드러나는 형식이다. 그리고 실제 공모라는 형식 속에서는 일정하게 모두 표준화 또는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매출과 기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예산 집행이나 규모에 대한 수요 준비를 광역자활센터에서도 2023년부터 준비하면서 수요에 대한 양적 개념만 존재하고 해당 집행의 보완이나 개선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공모라는 형식적 논리만 존재하지 중복지원이나 연속지원, 또는 지원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부분(기술, 금융, 영업, 컨설팅 등)도 묶음 형태를 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지속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또는 긴급지원의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 경영자들의 자금 사용에 있어서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중앙자활자금이 현장의 기업생존단계별 지원 항목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지원받는 기업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시점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량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보다 세밀하고 단계적인 반복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성장단계나 성숙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개발원이나 광역자활센터 모두 이에 대한 준비 수준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기 위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실태조사는 보다 지원의 정교함을 만드는데 자극을 주고 사업개선에 기여해 주고 있다. 실제로 자활기업이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기업의 환경은 내부나 외부 모두 단기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요인을 정태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원의 예산집행을 시기적으로 잘못 구분하면 오히려 藥보다는 毒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시점에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의 내용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의 일관성과 세밀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자활기업의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기업가적인 판단과

협업화에 대한 개방적 사고, 자발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과 기업에 대한 애정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활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출발선이 다르고 적극적인 기업으로서의 유지 노력이 다소 약화된 기업이다. 이는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면이다. 자활기업을 만드는데 현장에서는 5년이 넘는 과정과 헌신, 그리고 참여자의 의지 강화 등 복지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영역과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만드는 시장영역에서의 생존력을 모두 담보한다는 것은 이상적 개념이지 실제로 모두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강한 기업이 드러나듯이 자활기업도 부족한 정책적 지원 속에서도 실제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나온 지역자활센터의 노력의 산물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명을 타 유사 기업보다 늘려왔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의 생존을 늘리는데 있어 자활기업가의 흑자경영마인드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수기업으로 또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에는 내부적인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원부분에 대한 고민도 교육 차원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발원이나 광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전문가 pool을 제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활기업이 해당 지원의 활용도가 낮아지면 무의미한 시도이거나 비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자활기업의 경영자들에게도 이제 자활기업이 가지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와 현장의 요구도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토론의 마무리로 하고자 한다.